



국민계정리뷰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 [논고]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한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연구
- [자료]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 2020년 2/4분기 통계공표일정

2020년 제1호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은행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ok.or.kr>

국 민 계 정 리 뷰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 [논고]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한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연구	1
◆ [자료]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53
◆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89
◆ 2020년 2/4분기 통계공표일정	10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연구

유경원^a, 이상호^b

본 연구에서는 100만 여 개인차주의 신용정보에 기반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의 빅데이터 속성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변화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변동요인을 ‘유입’과 ‘유출’로 대별한 다음, 유입은 다시 ‘신규’와 ‘지속’으로, 유출은 ‘상환’과 ‘청산’으로 분해하였다. 나아가 이 4가지 요인에 대해 연령, 지역, 소득, 신용등급 등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계부채 변화의 주요인은 ‘신규유입’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유입과 유출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의 변화는 고신용자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가계부채 변화를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확장기에는 고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유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축기에는 저신용자의 유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평점 강화 때문인지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평점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의 유출입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부채 DB의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의 유입은 소비지출 특히 중·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최근 부채의 유입 감소는 이들 계층의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II. 기존 연구의 개관

III. 가계부채와 주요 경제변수 추이

1. 가계부채의 건전성
2. 가계부채와 소비

IV.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분석

1. 가계부채 DB의 주요 특성
2. 실증분석

V. 결론

a.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부교수 (e-mail: kwyoo@smu.ac.kr, phone: 02-2287-5039)

b.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부분부장 (e-mail: shyi@bok.or.kr, phone: 042-601-1002)

* 본 보고서 작성 시 유익한 논평을 주신 경제연구원 김기호 박사, 최종 보고서에 대해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 프로그래밍 작업 시 도움을 주셨던 대구대 황진태 교수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본고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이상호는 경제통계국 근무시 공동연구자로 참가하였다.

I. 서론

최근 빅데이터(big data)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흔히 '3V'(Volume, Velocity, Variety)라 불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자료로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되고 있다.¹⁾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데이터 저장·처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부문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의 예로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 DB'가 있다. 동 DB는 민간 신용정보사(CB)인 NICE 평가정보가 축적한 개인 신용평가 관련 방대한 금융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개인 차주대상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DB로 금융안정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이슈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²⁾

한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감소(deleveraging)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변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가계부채 수준 자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의 변화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동안 가계부채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정태적으로 파악하거나 건전성 여부 내지 그에 따른 리스크 정도를 판별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같은 표본조사 자료에 기반해서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치우쳐 있어 분석의 정도(精度)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주로 표본에 기반한 서베이 또는 시계열 총량(aggregate) 자료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건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빅데이터인 개인차주 가계부채 DB를 통해, 이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dynamic features)'³⁾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건전성 여부와 그로 인한 리스크 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계부채 DB는 자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료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하여도 통계적으

1) 빅데이터는 크게 사회안전망 자료, 거래내역 자료 및 사물인터넷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의 부표 1을 참조하시오.

2)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와 유사하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다른 CB사(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자료를 이용하여 DB를 구축, 가계부채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파악은 가계부채 '수준' 변화가 아닌 가계부채 '증가'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로 유의한 특성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Bhutta(2015)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계부채의 전년대비 변화를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로 대별하였다. 즉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가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을 경제적 내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파악하였지만, 가계부채가 저장(stock) 변수인 만큼 매기의 ‘유입’과 ‘유출’과 같은 유량(flow) 변수의 변동이 가계부채의 크기 변화($\Delta Debt_t = Debt_t - Debt_{t-1} = \text{유입}_t + \text{유출}_t$)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가계부채 DB를 활용하면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의 변동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데이터의 관측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채의 ‘유입’은 ‘신규유입’과 ‘기존지속’으로 나누고, 부채의 ‘유출’은 전체 부채를 모두 갚는 ‘청산’과 일부만 갚는 ‘상환’으로 구분하였다. 또다시 이러한 부채 변화의 네 가지 유형이 차주의 세분화된 특성(신용등급, 소득,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계부채 변동에 대한 유입 및 유출 요인의 영향, 그리고 어떤 특성의 차주 계층이 이러한 변동을 주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도출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변화가 금융회사의 신용기준 강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부채 유입의 감소와 유출의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에 대한 가계대출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즉 가계부채의 유입(신규, 지속) 및 유출(청산, 상환)과 같은 유량변수에 대한 기술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이러한 유량변수에 대한 상세분석을 위해 서베이 자료에 의존한 기존연구와 달리 금융 빅데이터 속성을 갖는 100만여 차주들의 객관적인 신용정보 기반의 가계부채 패널 DB를 활용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내지 영향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물론 실물부문(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종합연구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II장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기존연구를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dynamic features)에 관한 연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가계부채 DB 활용 연구로 나누어 최근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중요한 차이점 등을 기술하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존 평가를 두 가지 측면, 즉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측면, 그리고 소비에 대한 가계부채의 영향 측면에서 정리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제기한 가계부채 증가 패턴의 변화와 같은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을 요약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한다.

II . 기존 연구의 개관

본 장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크게 세 가지의 범주, 즉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가계부채 DB 활용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연구범주는 가계의 부채보유 변동 등 본 연구의 주된 이슈 중 하나로,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Habibullah et al.(2006)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s)이 뚜렷이 완화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Karasulu(2008)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로 젊은 연령대의 신규차주보다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차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의 주택보유 결정과,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Karasulu(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심화가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유동성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ynan and Kohn(2007)은 미국의 가계패널자료(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통해 금융혁신이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가계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혁신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의 경우 신규차주를 중심으로 한 신용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 신용 접근성이 이미 높은 기존차주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융혁신을 통한 유동성 제약 완화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성영애(2006)는 2000년과 2003년 간 부채 변동에 대해 여러 유형을 정의한 후, 해당 유형에 대해 다항로지트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부채보유 변동에 대한 가계의 특성을 추정하였다. 한편 유경원(2008)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가지고 가계부채의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으로 부채상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가계가 부채를 보유하는 등 부채의 지속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김우영·김현정(2009)도 가계 차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동태적 패널모형을 적용하여 가계부채의 지속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에 비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차입비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가계의 전형적인 재무적 특성

은 생애주기(life cycle) 이론을 통해 예측되는 것보다 부채규모 대비 금융자산 축적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유경원·황진태(2017)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가계가 보유하려는 적정 부채 수준의 존재를 가정하고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 조정속도를 추정하였다. 가령, 부채 조정속도가 높다는 것은 가계가 스스로 원하는 수준의 부채량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 조정속도가 느린 경우는 가계가 원하는 수준의 부채량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이들의 연구는 가계의 부채 조정이 금융시장 환경과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게 됨을 시사한다. 실제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크지 않거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낮을 경우 부채의 조정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반면,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있을 경우 해당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추론되었다. 최근 가계부채의 변동과 관련하여 Bhutta(2015)는 미국의 급격한 가계부채의 감소 이슈를 다루었는데, 경기호황 시 신규주택 구매 등 부동산 투자가 부채유입을 주도하였으며, 불황 시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채유출보다 부채유입의 급감이 부채감소의 주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연구(Karasulu, 2008; Dynan and Kohn, 2007)와는 달리 Bhutta (2015)는 부채유입 급감의 원인으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구매가 급감한 사실을 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강화된 대출규제가 부채 증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도 해당 연구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Bhutta(2015)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이 우리나라 신용정보(CB)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단기(2분기 이내)와 장기(4분기 이내)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연체발생 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신규차주의 연체확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으며, DTI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체확률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업률 변화에 따른 차주 소비패턴에서 DTI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용이 낮을수록 소비 감소의 폭이 커진다는 추정결과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연구결과는 기존연구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번째 범주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크게 나타난 원인과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감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 감소가 경기 침체의 주된

4)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국내연구로 김경수·유경원(2015), 유경원·서은숙(2016), 김현정·김우영(2009), 손종철·최영주(2015), 노형식·송민규(2017), 강종구(2017), 이동진(2019)이 있으며, 국외연구로는 Mina and Sufi (2015), Price et al. (2019) 등이 있다.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가계부채의 실물부문, 특히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체로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다채무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충격시 소비 감소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발 위기가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DB의 활용에 관한 연구’ 범주가 있다. 신용평가사(CB)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관련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 개인연구자, 중앙은행 및 연구기관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함준호 외(2010)는 총 2,210만 명의 개인신용 전수 미시자료(2009년 8월 기준)를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 차주별 특성, 금융업권별 부채상환 능력 등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 부채상환비율(DI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빌린 차주군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의 총량(aggregate) 거시지표를 이용한 가계 부실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신용거래정보 등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미시자료(micro data)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성준 외(2018)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DB의 미시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근 가계대출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등 대출구조 개선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대출의 분할상환방식 비중이 높아지고 만기가 장기화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차주에 의해 주도되고 고소득자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미시분석 이외에 구축된 가계부채 DB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을 소개하였다. 즉 100만 명을 상회하는 방대한 표본 집단에 기초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부채의 유형·상환방식, 만기구조 등 부채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연령, 신용등급, 연체율 등을 이용해 기존 거시총량지표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각적인 미시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호성(2017)도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변화를 금리요인과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한 후, 시간흐름에 따라 동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차주 특성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정호성(2018)은 또 다른 연구에서 가계부채 DB에 수록된 차주별 대출 및 연체정보를 이용

하여 차주의 부실요인을 살펴보고 자영업 차주의 부도요인과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요인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차주별 부도확률을 이용하여 추정된 차주별 기대 손실액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채 DB 수록 정보를 이용한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상당 분량의 지면에 실어 정부, 언론, 연구자 등 다양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문제점, 대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원이기도 하다⁵⁾. 가계부채 DB가 2015년 구축된 이후, 가계부채의 차주 특성별 비중 및 분포, 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자 등 부채 취약차주 비중, 자영업자 보유 부채 현황 등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연구센터’에서도 2016년 하반기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별 대출 정보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⁶⁾.

지금까지 정리한 선행연구들, 특히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기존연구에 의해서도 가계부채의 동태적 속성이 일부 파악되고 있었으나 가계조사(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분석이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회귀분석 기반의 분석으로 행태적 특성이나 속성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였다. 그리고 가계부채 DB를 활용하더라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기술적 분석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증분석을 하더라도 동태적 요인이 여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채 DB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여 이들의 변동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의 ‘유입’을 ‘신규유입분’ 및 ‘기존지속분’으로 구분하고, ‘유출’은 ‘청산’ 및 ‘상환’으로 세분하여 기술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유량적인 요인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차별점 이외에 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시사점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 변화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가계부채의 유입·유출 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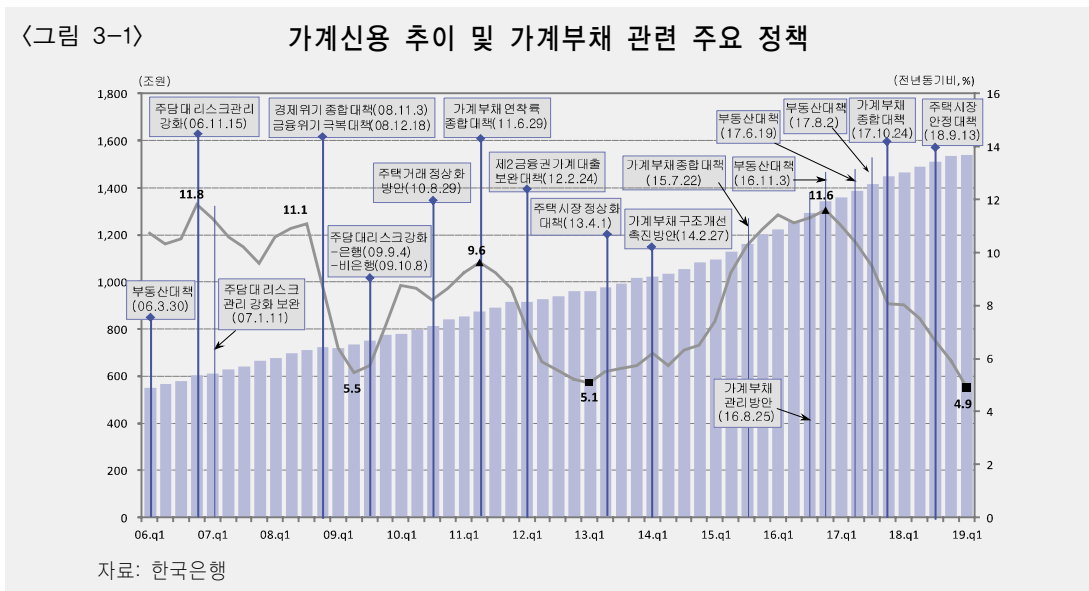
5)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 DB의 연혁과 의의, 주요 특징, 유용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처음 발간 시 분기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반기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보고서 작성 여건상 해당 호가 제때 발간되지 못하는 경우 있다.

III. 가계부채와 주요 경제변수 추이

1. 가계부채의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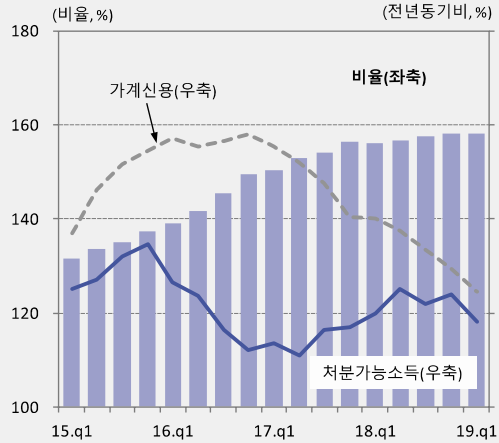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하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6년 하반기에 그 증가세가 정점에 이른 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총량 수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최근 증가세는 크게 꺾인 가운데 둔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가계부채는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5% 아래로 떨어졌다⁷⁾.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해 소득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소득 증가세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그림 3-3>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금융부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자산 증가세는 2018년 이후에 더욱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동 비율이 최근 들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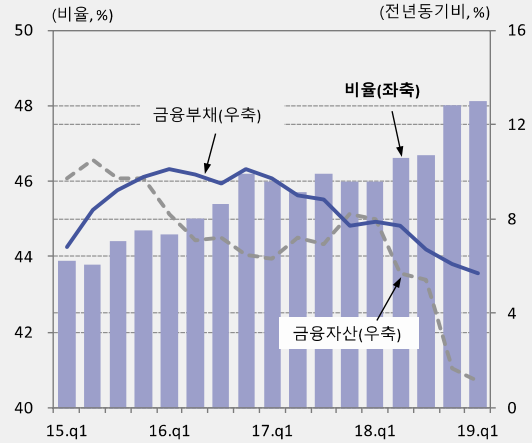
7) 본 논의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9.6)를 참고하였다. 보다 최근의 논의는 동 보고서 최신호를 참조하시오.

〈그림 3-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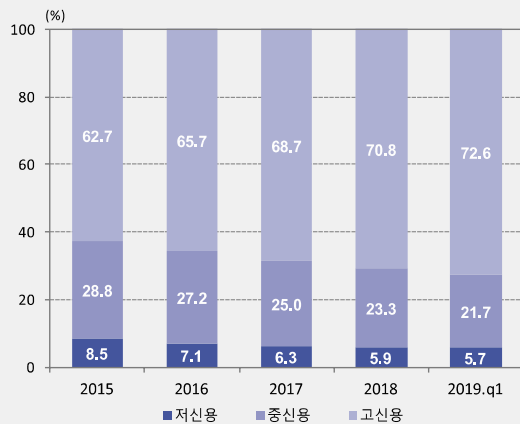
〈그림 3-3〉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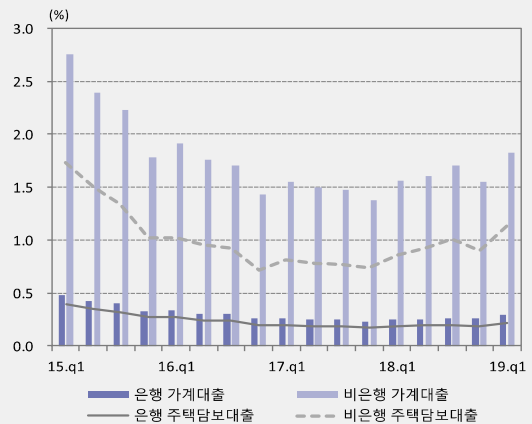
한편 <그림 3-4>의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차주 신용등급별로 가계부채의 구성비를 살펴 보면,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분기말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72.6%로 전년말 대비 1.8%포인트 높아진 반면 저신용 차주 대출 비중은 5.7%로 전년말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은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차주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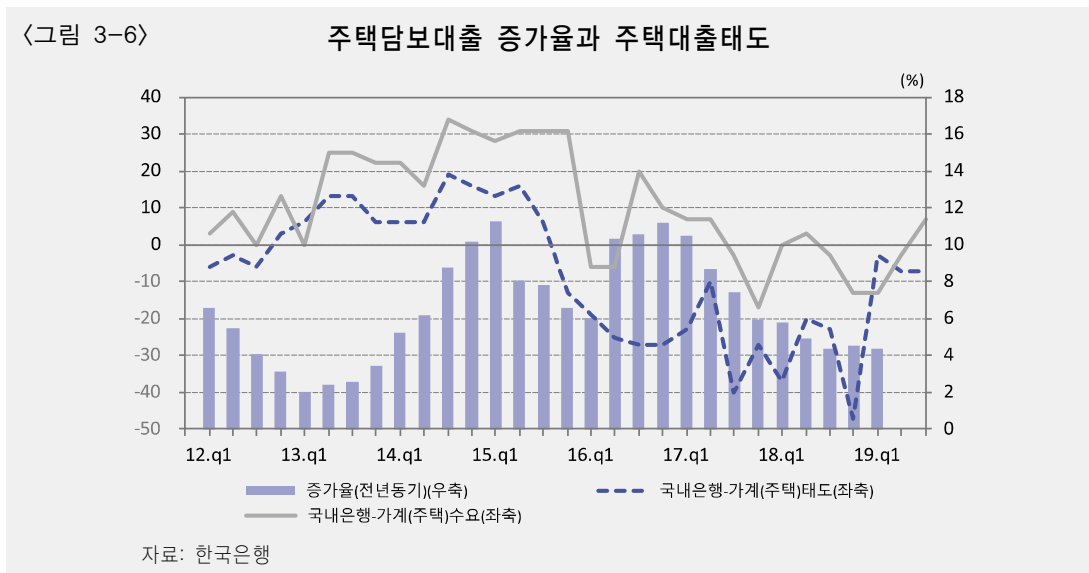
〈그림 3-5〉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연체율



자료: 한국은행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앞의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¹⁾와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출태도²⁾가 2015년 이후 강화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던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기조를 나타내었다. 반면 2016년의 경우 주택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지표는 완화기조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높아진 대출증가가 수요측 요인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대출조사에서 은행권 대출태도와 대출수요 조사 모두 0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대출 증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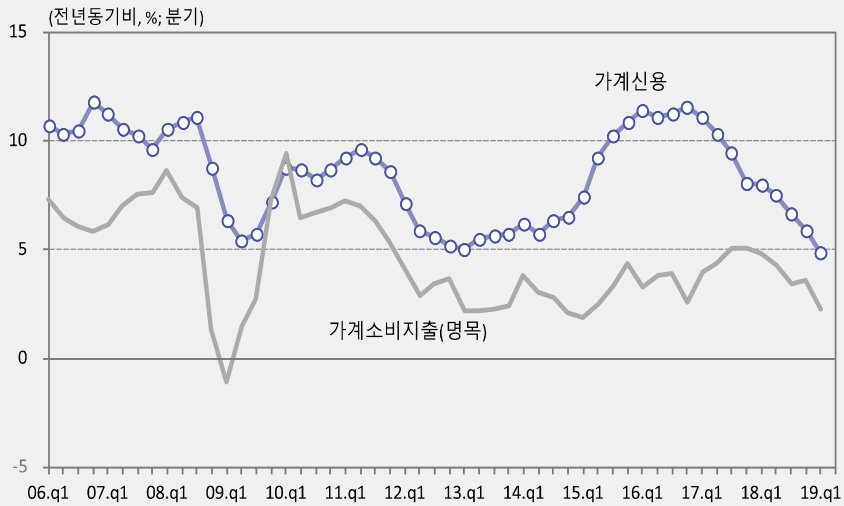
2. 가계부채와 소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증감과 소비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신용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2 가계부채 관련 정책일지를 참조하십시오.
2) 대출태도지수가 양(+)의 값이면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작성되어 현재 매분기마다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다. 대출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또는 축소 의지를 말하며 대출태도의 강화는 대출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거나 대출조건(이자율, 만기, 상환방식 등)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하여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대출수요도 대출태도와 함께 조사되는데, 이는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상환의사 및 상환능력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욕구(demand)를 의미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설명자료).

<그림 3-7>

가계신용 및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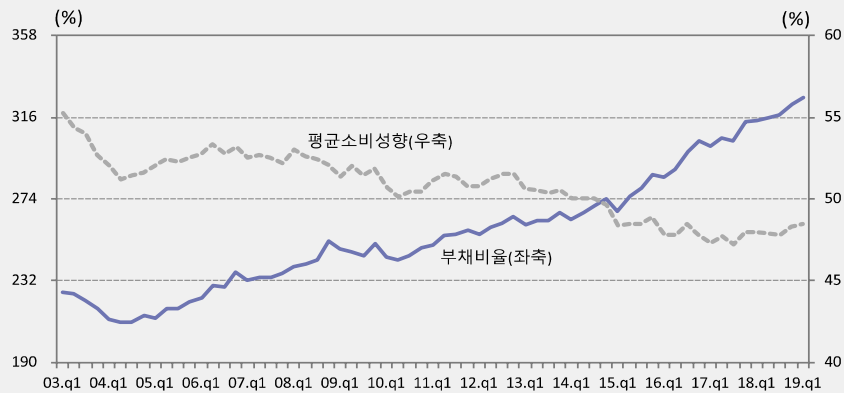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3-8>을 보면 소비성향이 급락하던 2003~2004년의 신용카드 대란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간 모두 부채비율의 가파른 상승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외에도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 역시 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¹⁰⁾

<그림 3-8>

부채비율과 소비성향 추이



주: 부채비율 및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가계신용/GDP 및 민간소비/GDP로 정의
 자료: 한국은행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진(2019)을 참조하십시오.

IV.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 분석

1. 가계부채DB¹¹⁾의 주요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감소(deleveraging)를 경험한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가계부문의 취약성 파악과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계부채 관련 미시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미국 FRB 뉴욕연준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CCP)¹²⁾을 벤치마크하여, 2015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계부채 DB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이하 '가계부채 DB')는 민간 신용정보사(NICE 평가정보)가 보유한 개인의 신용정보 중 일정 표본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³⁾. 이들 표본은 신용거래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동일인을 매분기 추출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패널DB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 DB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계부채 DB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신용 등 기존의 총량 거시통계에 비해 개인 차주별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기반의 금융 빅데이터(big data)이다. 개인별 연령·거주지·신용등급·소득수준 등과 같은 고유 특성정보, 대출액·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 등의 금융거래정보, 연체금액·세금체납·채무불이행 등 신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분기단위로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소득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시 제출된 증빙소득이 주를 이루며,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정보사가 자체적으로 추정된 소득을 소득정보로 간주한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차주별 과거 증빙소득, 신용카드실적, 직업정보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계부채 DB의 주요 정보 현황과 출처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DB에 수록된 정보는 시의성이 높다.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기

11) 김성준 외(2018)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2) 이를 위해 FRB 뉴욕연준 미시분석반(Microeconomic Studies Function)은 가계부채의 총량 데이터 이외에 개별 경제주체 수준에서의 부채상황 분석 등을 위해 민간 신용평가사인 Equifax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분석 결과들이 JME, QJE, AER 등 유명저널에 실리고 있다 (Bhutta 2015, Mian and Sufi 2009, 2011 등).

13) 정확히 말하면 2018년말 기준 전체 신용활동인구(모집단) 4,530.6만 명의 2.4%인 약 110만 명이다.

존 서베이는 1만 가구 내외의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표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DB는 상대적으로 큰 100만 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작성되며 해당분기 종료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DB에 수록되므로 시의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들의 금융거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베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정보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서베이 방식에 의한 데이터의 경우 무응답 및 표본이탈, 소득이나 부채에 대한 과소응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계부채 DB의 경우 금융 소비자의 신용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에서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용성으로 인해 가계부채 DB는 차주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유형,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 부채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개별 차주의 부채 규모와 연령, 신용등급, 연체율 등 실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미시분석도 수행할 수 있다.

〈표 4-1〉 가계부채 DB 주요 정보현황과 출처

내 용	주요 변수	출 처
식별정보	연령대, 성별, 거주지, 신용점수·등급, 소득·등급 등	신용정보원, NICE 평가정보
가계대출	업권, 상품, 총건수, 총금액, 신규건수 및 금액 등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신용관리대상) 등록 총건수 및 총금액, 세금체납 관련 총건수 및 총금액, 파산/면책관련 확정 총건수 및 총금액, 개인 회생 확정 총건수 및 총금액 등	신용정보원
기업여신공여	여신잔액: 업종, 업권, 상품, 신용공여잔액, 만기도래액 등	신용정보원
	여신한도: 업종, 업권, 상품, 한도액 및 잔액 등	
	여신담보: 업종, 업권, 상품, 담보잔액 등	
대부업대출	대부업대출 기관수 및 총금액	NICE 평가정보
계좌별대출	업권, 상품, 상환방식, 대출용도, 만기일, 대출잔액, 거치기간, 연체 대환대출여부, 원리금상환액 등	NICE 평가정보
카드	신용카드 한도, 이용금액, 체크카드 이용금액 등	NICE 평가정보
연체	업권, 상품, 미해제연체 총금액, 분기중 신규연체 등	NICE 평가정보

자료: 김성준 외 (2018)

한국은행이나 학계 연구자들은 동 DB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차주특성별 분포, 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자 등 부채 취약차주 비중, 자영업자 보유 부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통계와는 달리 특정 차주의 기간별 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 분석(예: 신

용등급간 이동, 은행·비은행간 금융권 전환, 부채상환방식 변화, 취약계층의 동태적 추이 등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나 학계의 연구 등을 통해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용성 및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DB는 가구가 아닌 차주 개인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는 데다 실제 소득이나 자산(금융 및 실물) 정보가 미비하여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을 가계부채 DB 자료¹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 기술분석과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가. 기술분석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본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의 핵심은 가계부채DB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100만여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에 대한 세분화한 분석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hutta (2015) 방법론을 원용한다. 동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변화 요인을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로 대별한다. 또 유입은 ‘신규유입’(entrants)과 ‘기존지속’(increasers)으로, 유출은 전체 부채를 모두 갚는 ‘청산’(exiters)과 일부를 갚는 ‘상환’(decreasers)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를 또다시 차주의 특성(신용등급, 소득, 연령 및 거주지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특성의 차주가 이를 주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정의상 부채는 저량(stock) 변수이므로 부채의 증가($\Delta Debt_t = Debt_t - Debt_{t-1}$)는 금기 부채잔액($Debt_t$)에서 전기 부채잔액($Debt_{t-1}$)을 차감한 금액으로 유량변수이다. 따라서 이를 유량(flow) 변수로 표시하면 유입(IF_t)과 유출(OF_t)의 합, 즉 $\Delta Debt_t = IF_t + OF_t$

14) 자료의 원활한 분석을 위해 전체 관측치가 아닌 20% 부표본(subsample)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가계부채DB는 100만여 차주 자료로 2012년 1분기부터 사용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2018년 4분기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00만여 차주의 7년(28분기) 자료는 3 Giga (3000M bytes)가 넘는 자료로 이와 같은 대용량 자료에 대한 분석은 통상 20% 부표본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성준외(2018)도 20%의 부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으로 나타낼 수 있다.¹⁵⁾ 유입(IF_t)은 신규유입분(N_t)와 기존지속분(C_t) 대출로 구분되는데($IF_t = N_t + C_t$), 신규대출(N_t)은 전기 부채잔액이 0에서 금기에 부채잔액이 늘어난 경우, 그리고 지속대출(C_t)은 전기 부채잔액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금기 부채잔액이 전기에 비해 늘어난 경우로 정의한다. 즉 기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금기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 지속대출(C_t)이라 정의하고 기존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금기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는 신규대출(N_t)로 정의하기로 한다. 유출(OF_t)은 청산(CL_t)과 상환(RP_t)으로 구분되는데($OF_t = CL_t + RP_t$), 부채의 청산(CL_t)은 전기 부채잔액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금기 부채잔액이 0이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부채의 상환(RP_t)은 전기 부채잔액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금기 부채잔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한 경우로 정의한다.¹⁶⁾ 이에 따라 금기의 부채증가는 유입 요소인 신규대출 발생과 기존부채의 증가, 그리고 유출 요소인 부채의 전액 상환과 일부 상환의 합($\Delta Debt_t = (N_t + C_t) + (CL_t + RP_t)$)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 개별차주들의 부채증가의 합은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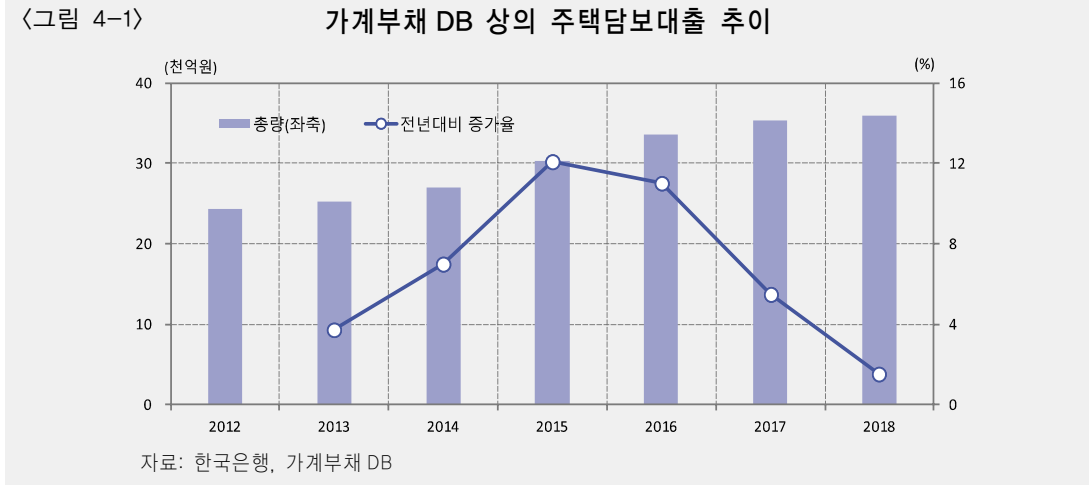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DB의 빅데이터와 패널자료 속성을 활용해, 개별 차주들의 부채 변화를 위의 정의와 같이 구분하고 이와 같은 네 가지 유입과 유출 요인들을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인 연령, 지역, 소득, 신용등급 등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계부채 DB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총량자료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을 정점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¹⁷⁾ 부채감소를 경험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없으나, 가계부채의 전년대비 증가세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은 200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5) 여기서 유출(OF_t)은 음(-)의 값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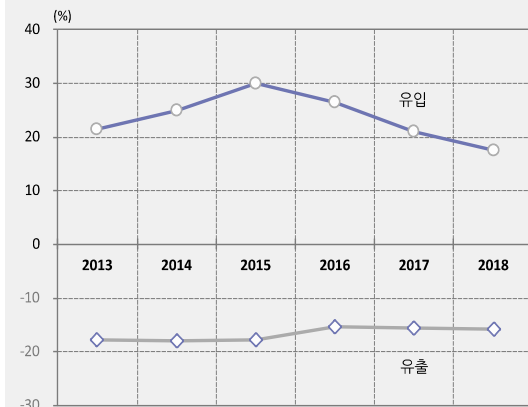
16) 추가적으로 부채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전기 부채잔액이 0인 상황에서 금기 부채잔액도 0인 경우와 전기 부채잔액이 0보다 큰 상황에서 금기 부채가 전기 부채와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차주가구 대상 분석이므로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관측치가 없거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7)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가계부채 DB중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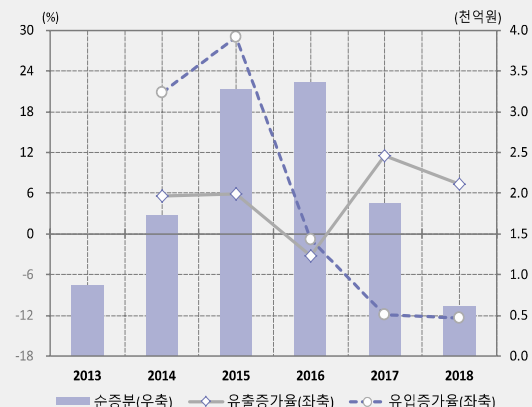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변화 요인을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가계부채의 증가세 변화에 있어서 주된 요인은 ‘유입’으로 나타났으며 ‘유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입은 대출잔액 대비 30% 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 이후 20% 미만까지 하락한 반면 유출은 20% 안쪽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1999~2011년) 유입은 40%에서 12%대로 급락했던 반면 유출은 20~25% 내외에서 안정적이었다(Bhutta, 2015). 즉 두 나라 모두 유입이 가계부채 변화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미국과 달리 부채감소를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비 유입과 유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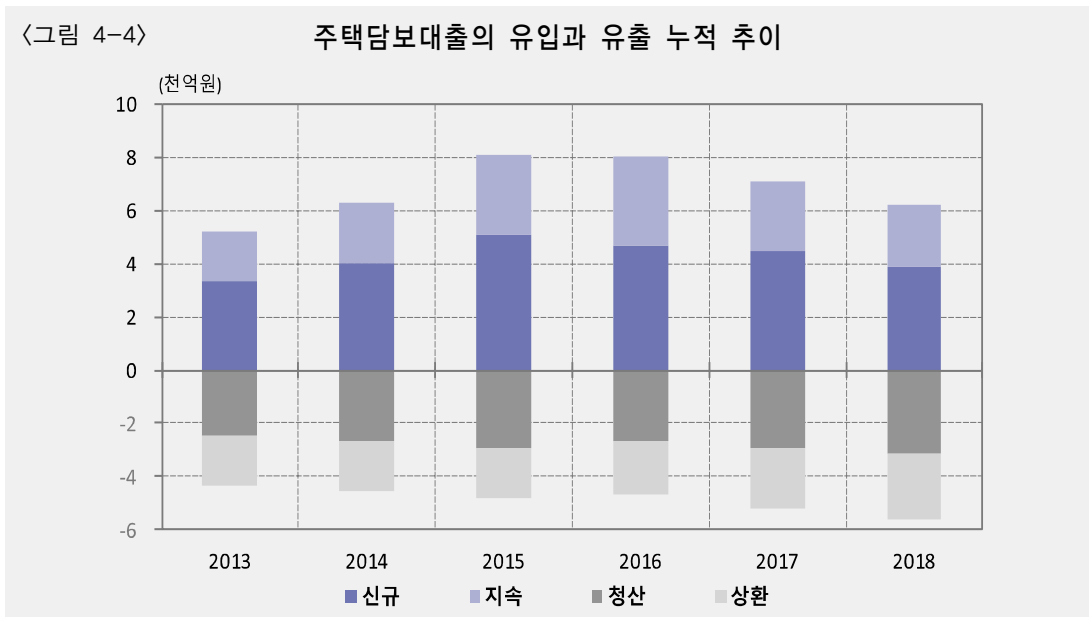
〈그림 4-3〉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유입과 유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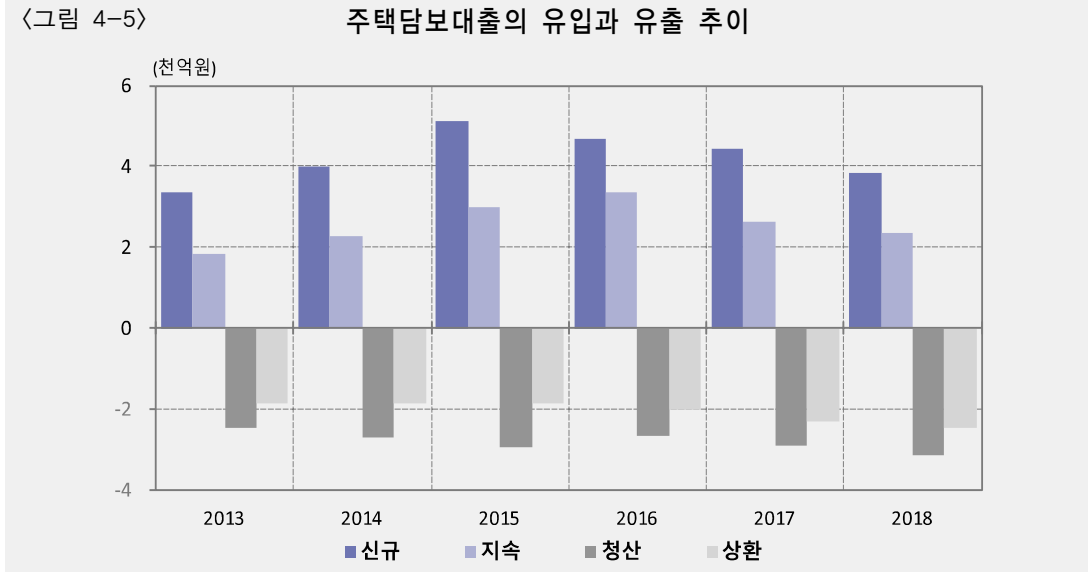


한편 가계부채의 증가세 변화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대해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가 체증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부채 확장기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채가 체감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부채 수축기로 볼 수 있다. 부채의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유입과 유출의 양태가 달라지는데 <그림 43>에서 보듯이 유출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부채의 유입은 진폭이 커서 부채 증가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의 핵심요인인 ‘유입’을 세분하여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증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그림 44> 및 <그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 대출이 부채 유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규 대출의 증가에 따라 이후 기존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출’도 청산되는 규모와 감축되는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부채를 청산하는 규모가 일부액을 상환하는 규모 보다 크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매년 유출에 비해 유입이 많음 (유입 > 유출)을 의미하고, 최근의 부채 증가세가 둔화로 전환된 것은 유입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상태에서 유출 증가세도 다소 높아져 순증분의 증가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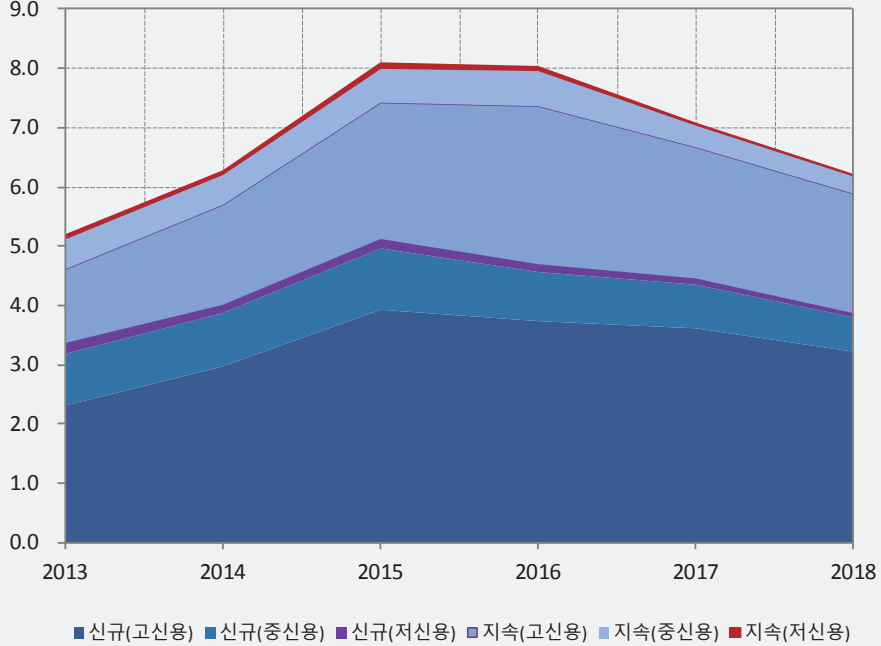


다음에는 이와 같은 유입(신규, 지속)과 유출(청산, 상환)을 보다 세분하여 신용등급(저·중·고)에 따라 어느 계층이 보다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계부채 DB에는 개인차주들에 대한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1~3등급을 '고신용자'로, 4~6등급을 '중신용자'로, 그리고 7~10등급을 '저신용자'로 분류하였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신용자들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이들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림 4-6>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비 유입과 유출 비중 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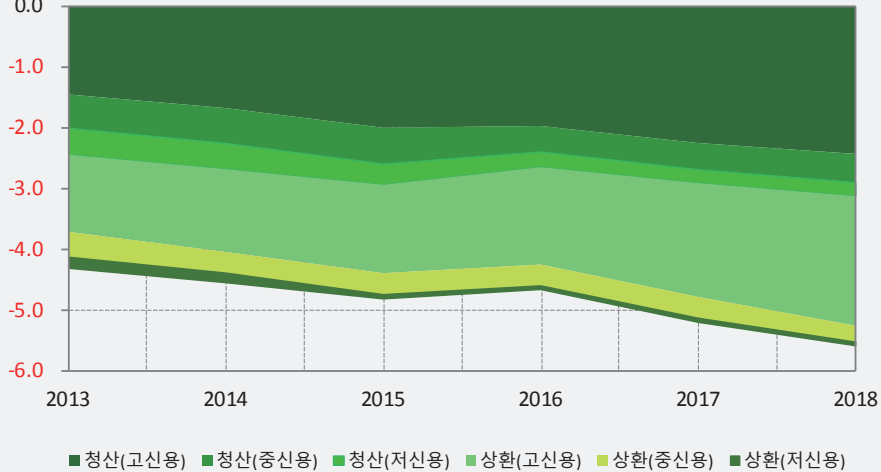
a. 유입

(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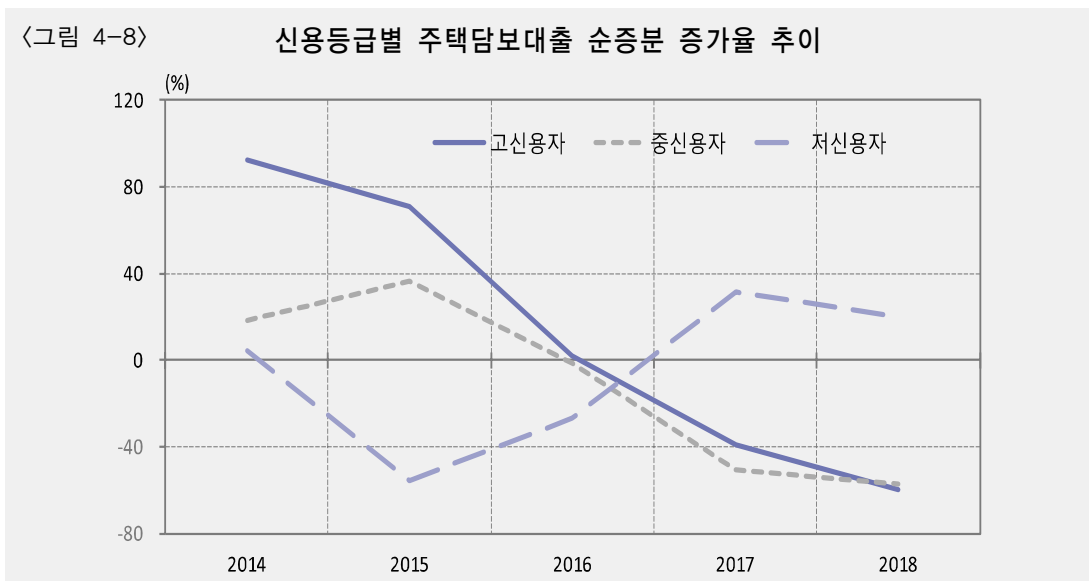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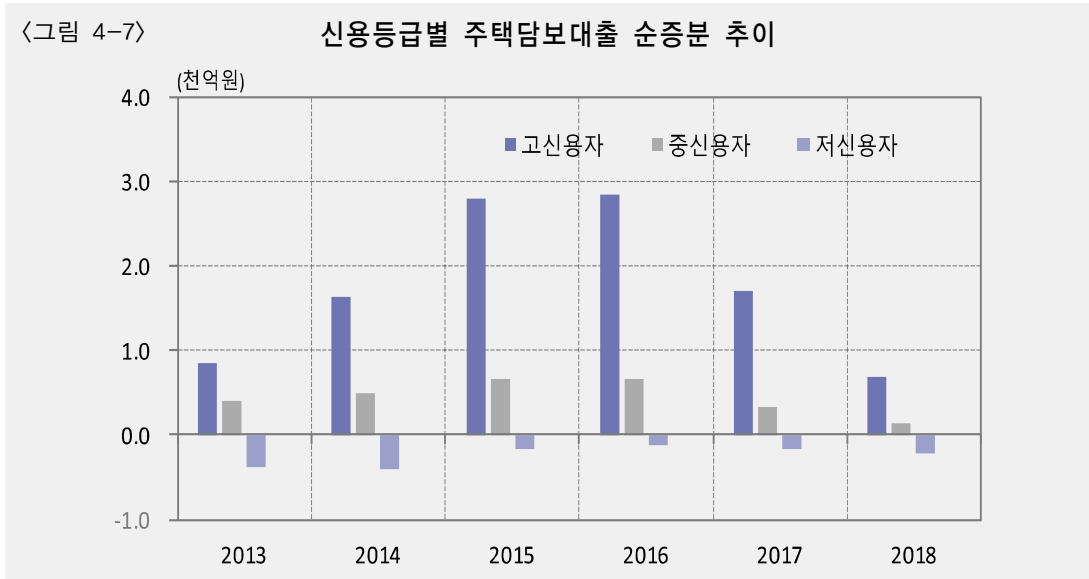
b. 유출

(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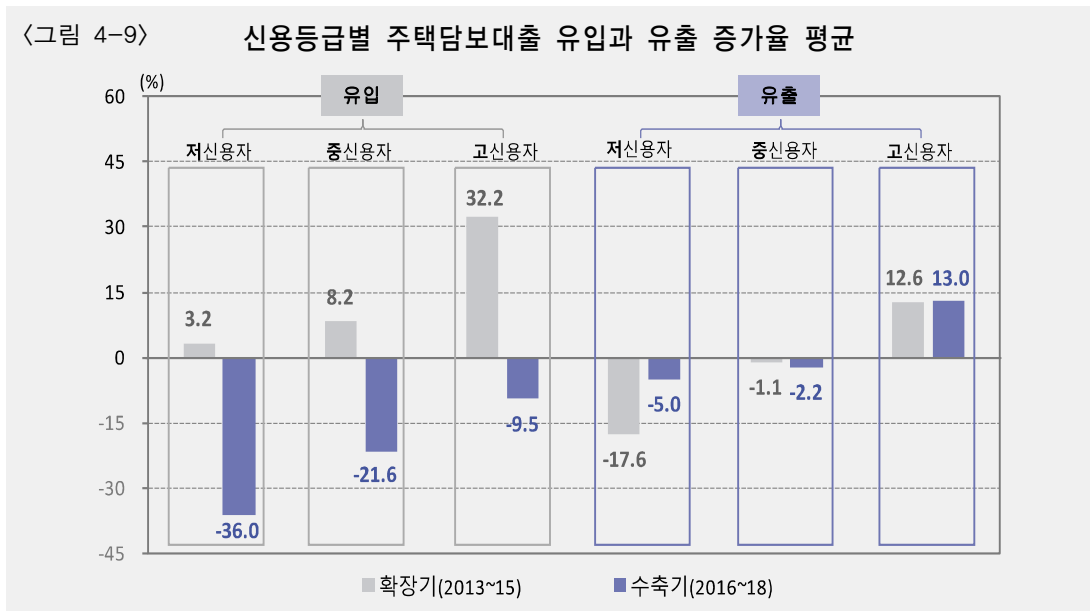
아울러 신용등급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47> 및 <그림 48>에서 보듯이 고신용자의 순증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최근 이와 같은 순증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용자들의 경우 유입과 유출을 합할 경우 순유입 계층이

라고 할 수 있으나 고신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어 유입보다는 유출시키는, 즉 부채를 신규로 발생시키거나 늘리기보다는 상환하거나 청산하는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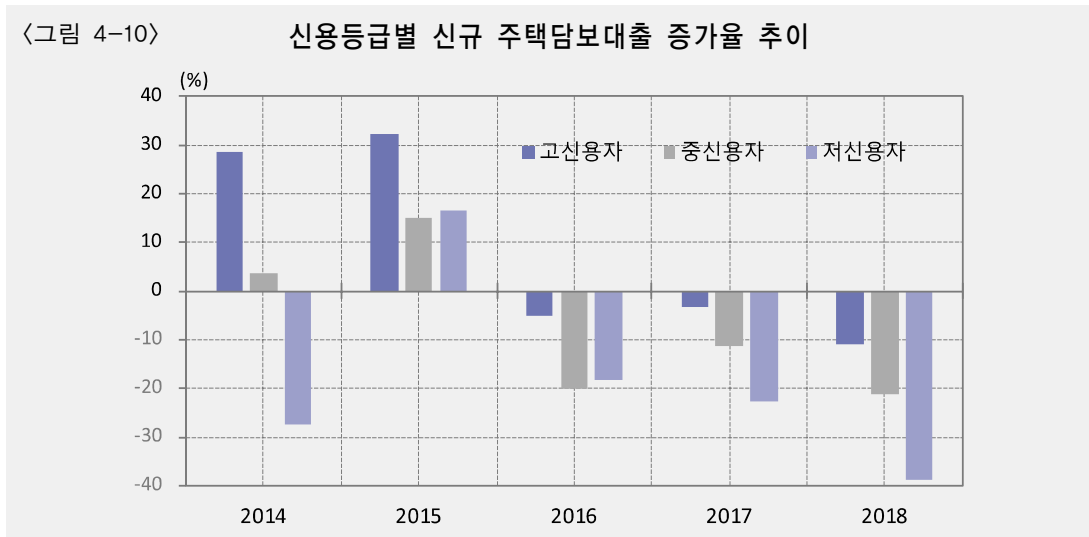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신용등급별 추이를 가계부채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4-9>는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의 유입 증가율 및 유출 증가율의 기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 확장기(2013~2015)와 수축기(2016~2018)의 신용등급별 ‘유입’을 비교해 보면 대칭적이다. 즉 가계부채가 체증적으로 증가하였던 ‘확장기’에 고신용자 계층의 유입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신용자, 저신용자 순으로 유입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로 돌아선 ‘수축기’에는 그 반대로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계층의 유입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유출’의 경우, 가계부채 ‘확장기’에 유입과 마찬가지로 고신용자 계층의 유출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저신용자의 유출은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수축기에는 고신용자 계층의 유출 증가율은 확장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중신용자 계층의 유출도 소폭 감소하였고 저신용자 계층은 유출 감소율이 확장기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유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한정 지어 보아도 201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차입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등급별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저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계층, 연령대 및 지역별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저·중·고소득 계층이



나 청·장년 및 고령자별 그리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별로 명확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¹⁸⁾

이와 같은 가계부채 DB를 활용한 기술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입 요인 중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의 변화는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신용자의 유입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시기에 고신용자들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하락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고신용자에 비해 저·중신용자의 유입 하락세,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 유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부채의 확장기에는 고신용자를, 그리고 수축기에는 신용리스크가 높은 저·중신용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유입과 관련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하락하는 수축기에 있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감소는 신용공급이 필요한 이들 계층의 최초 주택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가 은행 자체의 선제적인 신용평가 기준의 강화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 소득 감소 등에 따른 자체적인 수요의 감소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축소가 저신용자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신용평점 기준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hutta, 2015). 만약 선제적으로 강화된 신용기준의 적용으로 실질적

18) 신용등급 이외에 소득계층, 연령대, 지역별 분석표는 <부록> 부표 3을 참고하시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전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 분석표도 <부록> 부표 4 및 부표 5를 각각 참조하시오.

인 주택신규 구입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은행 등 공급 부문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증가세의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인지 여부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감소는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연구의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지출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신규차입의 위축 및 유출의 확대로 중·저신용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존연구의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감소는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계부채 DB가 제공하는 개인차주 신용카드 이용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주택 대출자에 대한 대출 축소는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의 신용평점 강화에 기인하는가? 둘째, 가계부채의 유입 및 유출 변동이 개인차주들의 신용카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 소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나. 회귀분석

본 소절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와 관련한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러한 회귀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hutta(2015)를 원용하여 신규주택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은행의 신용평점 강화로 축소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부채의 유입과 유출 변화가 신용카드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전술했듯이 한동안 급증하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분석에서는 기존차주보다는 신규차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DB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차주보다 신규차주의 비중이 더 큰데, 이는 미국 가계부채 문제를 다룬 Bhutta(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동 연구에서는 은행의 신용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차주의 차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신규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채 수요자의 가계특성(수요측면)에 따른 것

인지, 아니면 공급자인 은행의 신용기준 강화(공급측면)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세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실제 가계부채 변동은 가계의 소비 및 투자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황과 관계가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 유입 및 유출은 소비행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Song (2019)을 따라 가계부채 DB내 정보중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을 소비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회귀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가계부채 DB의 20% 부표본(패널자료)을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며, 해당 기술통계량의 경우 <부표 6a>와 <부표 6b>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신용점수가 신규차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생애 첫 신규 주택마련자일 확률이 높은 20~30대와 20~40대를 대상으로 신용점수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¹⁹⁾ 이러한 분석은 가계의 어떤 특성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러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패널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Pr(y = 1|x) = \Omega(x'\beta) \quad (1)$$

식(1)에서 y 는 20~30대 또는 20~40대를 대상으로 하여 가계부채 DB자료 중 1/4분기 기준으로 한 차주가 직전연도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다가 현기에 부채가 발생한 경우를 1, 나머지를 0으로 하는 변수이다. 여기서 Bhutta(2015)와는 달리 20~40대처럼 대상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추가로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실질적 주택구매 연령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식(1) 모형에서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내는 x 에는 로그 신용점수, 성별, 연령, 로그 실질소득, 연도더미 및 지역더미가 포함되며, β 는 추정을 위한 계수벡터이다. 가계부채 DB 자료가 패널 형태임을 감안하여 패널분석 수행을 위해 두 개의 분석대상 기간 2015년과 2018년을 사용하기로 한다.²⁰⁾

19) 가계부채 DB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생애최초 대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금액만을 파악할 뿐 이들 대출이 동 차주의 최초 대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애 초반기에 해당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신규대출이 있는 경우를 우선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택구입 연령을 감안하여 40대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20) 분석 기간을 2015년과 2018년으로 정한 이유는 각각 부채 확장기와 수축기에서 선택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이 2015년에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2018년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시현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해를 비교해 보아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의 가정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던 2015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나타난 2018년에 은행권이 신규 주택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평점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정식에 신용평점과 2018년도 더미변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분석식에 추가하여 이 변수들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날 경우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상향된 기준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2a>와 <표 4-2b>에는 각각 전체 금융회사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가구가 신규차주일 확률에 가계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probit random effects)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보다 신용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표 4-2b>는 pooled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pooled 프로빗 모형과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4-2a>의 경우 두 추정모형의 결과가 사실상 동일해 pooled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금융기관이나 은행권 대출 모두 신용평가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계가 신규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신용평가점수가 신규대출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평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여부의 유효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주 특성이 남성 그리고 소득과 연령(20대)이 높을수록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8년을 나타내는 연도더미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역적 이질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그 신용점수와 2018년 더미변수 간 교차항의 경우 그 추정계수가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8년 들어 금융회사의 대출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점수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대출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기술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회귀분석에서도 차주들의 신용평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은행의 신용평점 강화를 통한 대출제한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도 가계부채의 급격한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점 기준의 상향 적용 등을 통하기 보다는 경제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과 금리인상, 그리고 소득 여건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a〉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점수 간의 관계

종속변수: 주택담보대출여부(신규대출 = 1)	Panel Probit (RE)	
	20~30대	20~40대
로그 신용점수	1.007*** (0.102)	1.073*** (0.074)
로그 신용점수 × 2018년	-0.036 (0.153)	0.079 (0.116)
연도더미 (2015년 대비)		
- 2018년	0.120 (1.013)	-0.309 (0.765)
성별 (남: 0, 여: 1)	-0.155*** (0.017)	-0.101*** (0.013)
연령	0.031*** (0.002)	0.005*** (0.001)
로그 실질소득	0.523*** (0.034)	0.466*** (0.024)
로그 실질소득 × 2018년	-0.025 (0.044)	-0.087*** (0.030)
지역더미 (수도권 대비)		
- 영남권	0.324* (0.173)	0.312** (0.125)
- 호남권	0.350** (0.176)	0.325*** (0.127)
- 충청권	0.277 (0.175)	0.243* (0.127)
- 강원권	0.393** (0.187)	0.356*** (0.135)
- 제주권	0.209* (0.114)	0.193** (0.080)
상수항	-12.729*** (0.662)	-12.065*** (0.483)
관측치 수	139,281	215,578
차주 수	83,015	125,480
Wald 검정 통계량	1,996.84*** [0.000]	2,144.59*** [0.000]

주: 1) () 안은 표준오차이며, [] 안은 p-값임.

2)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연도더미는 2015년이 기준임: 2015년 '0', 2018년 '1'

4) 지역더미는 수도권이 기준임: 수도권 '1', 영남권 '2', 호남권 '3', 충청권 '4', 강원권 '5', 제주권 '6'

〈표 4-2b〉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점수 간의 관계

종속변수: 은행주택담보대출(신규대출 = 1)	Pooled Probit		Panel Probit (RE)	
	20~30대	20~40대	20~30대	20~40대
로그 신용점수	0.346*** (0.071)	0.256*** (0.052)	0.350*** (0.072)	0.260*** (0.053)
로그 신용점수 × 2018년	0.148 (0.106)	-0.083 (0.075)	0.149 (0.108)	-0.085 (0.076)
연도더미 (2015년 대비)				
- 2018년	-0.863 (0.709)	0.706 (0.505)	-0.864 (0.718)	0.724 (0.512)
성별 (남: 0, 여: 1)	-0.038*** (0.015)	-0.051*** (0.012)	-0.039*** (0.015)	-0.052*** (0.012)
연령	0.021*** (0.002)	0.000 (0.001)	0.021*** (0.002)	0.001 (0.001)
로그 실질소득	0.216*** (0.028)	0.295*** (0.021)	0.219*** (0.028)	0.299*** (0.022)
로그 실질소득 × 2018년	-0.011 (0.035)	-0.029 (0.025)	-0.012 (0.035)	-0.030 (0.025)
지역더미 (수도권 대비)				
- 영남권	-0.090 (0.152)	0.005 (0.114)	-0.091 (0.154)	0.005 (0.115)
- 호남권	-0.173 (0.155)	-0.016 (0.116)	-0.175 (0.157)	-0.016 (0.118)
- 충청권	-0.102 (0.154)	0.010 (0.116)	-0.103 (0.156)	0.010 (0.117)
- 강원권	-0.107 (0.165)	0.021 (0.124)	-0.109 (0.167)	0.021 (0.125)
- 제주권	-0.120 (0.114)	-0.036 (0.081)	-0.122 (0.115)	-0.037 (0.082)
상수항	-6.009*** (0.462)	-5.271*** (0.339)	-6.092*** (0.475)	-5.344*** (0.348)
관측치 수	139,281	215,578	139,281	215,578
차주 수			83,015	125,480
LR & Wald 검정 통계량	892.19*** [0.000]	783.29*** [0.000]	746.15*** [0.000]	706.89*** [0.000]

주: 1) () 안은 표준오차이며, [] 안은 p-값임.

2)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연도더미는 2015년이 기준임: 2015년 '0', 2018년 '1'

4) 지역더미는 수도권이 기준임: 수도권 '1', 영남권 '2', 호남권 '3', 충청권 '4', 강원권 '5', 제주권 '6'

2) 부채 유입 및 유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아래의 패널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가계부채의 저장변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가계부채 부담을 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 변수 또는 가계부채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보다 직접적인 가계부채의 동태적 변화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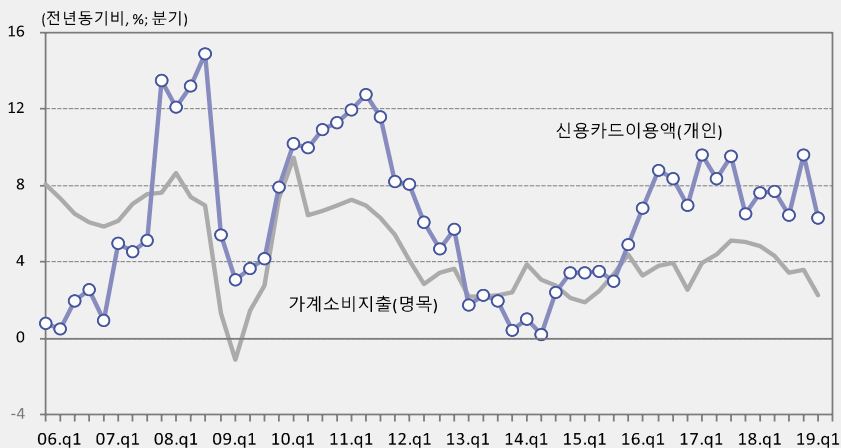
$$E(\log c|z) = z' \gamma \quad (2)$$

식(2)에서 $\log c_{it}$ 는 가계부채 DB 중 4/4분기 기준으로 로그 실질 신용카드 지출액을 나타낸다. 설명변수 벡터 z_{it} 에는 부채 유입 및 유출, 중·저 신용계층 더미, 성별, 연령, 로그 실질 소득, 연도더미, 지역더미가 포함되며, γ 는 관련 추정계수 벡터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2013~2018년이며, 추정방법으로는 pooled OLS, 확률효과(RE, Random Effects) 모형, 고정효과(FE, Fixed Effects) 모형이 사용된다.

한편 가계부채 DB는 기존 서베이와 달리 소비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신용카드 이용액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DB를 활용하고 있는 Song(2019) 연구와 유사하게 소비의 대용변수로 신용카드 이용액을 사용하기로 한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비지출에 비해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어느 정도 가계소비 증가 패턴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1>

신용카드 지출액 및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DB

아울러 UBS(2018)에 따르면 소비자 거래에서 현금거래 결제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대폭 감소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비현금화가 진행된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카드 등 비현금화된 수단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 확대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지출에 대한 대용변수로 다른 나라와 달리 신용카드 지출액 사용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소절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부채 유입과 유출이 신용카드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이러한 영향이 중·저신용자 계층에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설의 검정을 위해 식(2) 모형에 유입과 유출 변수와 중·저신용자 계층 더미변수를 곱한 교차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 <표 43>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전체 가계대출 기준의 유입과 유출이 개인 차주들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ooled OLS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확률효과(RE) 및 고정효과(FE)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우스만 검정결과 고정효과 결과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본 절에서는 FE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로 한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지출액은 실질소득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 연령과는 역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연령과 함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어느 정도 기존의 소비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고신용자 대비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예상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한편 신용등급에 따른 유입과 유출의 효과를 보면, 유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체 가계대출 모두 동일하게 신용등급별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여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채유입에 따른 소비지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입액이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저신용자일수록 소비지출이 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출²¹⁾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체 가계대출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계층별 해당 교차항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유출은 신용카드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저신용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거나 중신용자의 경우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에서는 고신용자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저신용자의 경우 유출과 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관계를, 그리고 중신용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양(+)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1) 부채유출은 절대 값으로 처리한 양(+)의 값이다.

〈표 4-3〉 회귀분석 추정 결과: 가계대출이 신용카드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종속변수: 로그 실질 신용카드 지출액)	주택담보대출 기준			전체 가계대출 기준		
	Pooled OLS	RE	FE	Pooled OLS	RE	FE
부채유입	0.00016*** (0.00001)	0.00003*** (0.00000)	0.00001*** (0.00000)	0.00017*** (0.00000)	0.00004*** (0.00000)	0.00002*** (0.00000)
부채유출	0.00013*** (0.00001)	0.00001** (0.00000)	-0.00001** (0.00000)	0.00009*** (0.00000)	0.00001*** (0.00000)	-0.00000 (0.00000)
부채유입 × 중신용자	0.00021*** (0.00001)	0.00009*** (0.00001)	0.00006*** (0.00001)	0.00007*** (0.00001)	0.00005*** (0.00000)	0.00004*** (0.00000)
부채유입 × 저신용자	0.00036*** (0.00003)	0.00022*** (0.00002)	0.00020*** (0.00002)	0.00035*** (0.00002)	0.00028*** (0.00001)	0.00026*** (0.00001)
부채유출 × 중신용자	0.00021*** (0.00001)	0.00008*** (0.00001)	0.00005*** (0.00001)	0.00020*** (0.00001)	0.00007*** (0.00001)	0.00004*** (0.00001)
부채유출 × 저신용자	-0.00004** (0.00002)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3*** (0.00001)	-0.00003*** (0.00001)	-0.00004*** (0.00001)
신용자 더미 (고신용자 대비)						
- 중신용자	-0.385*** (0.003)	-0.318*** (0.003)	-0.235*** (0.003)	-0.394*** (0.003)	-0.321*** (0.003)	-0.237*** (0.003)
- 저신용자	-0.566*** (0.005)	-0.634*** (0.005)	-0.550*** (0.005)	-0.582*** (0.005)	-0.643*** (0.005)	-0.556*** (0.005)
로그 실질소득	0.935*** (0.004)	0.466*** (0.004)	0.258*** (0.004)	0.920*** (0.004)	0.464*** (0.004)	0.255*** (0.004)
연령	0.065*** (0.001)	0.141*** (0.001)	0.322*** (0.002)	0.065*** (0.001)	0.140*** (0.001)	0.321*** (0.002)
연령 제곱	-0.001*** (0.000)	-0.002*** (0.000)	-0.003*** (0.000)	-0.001*** (0.000)	-0.002*** (0.000)	-0.003*** (0.000)
성별(남: 0, 여: 1)	0.090*** (0.003)	-0.010* (0.005)		0.092*** (0.003)	-0.009* (0.005)	
연도더미 (2013년 대비)						
- 2014년	0.061*** (0.004)	0.087*** (0.003)	-0.010*** (0.002)	0.061*** (0.004)	0.087*** (0.003)	-0.010*** (0.002)
- 2015년	0.140*** (0.004)	0.186*** (0.003)	-0.012*** (0.002)	0.138*** (0.004)	0.185*** (0.003)	-0.012*** (0.002)
- 2016년	0.230*** (0.004)	0.285*** (0.003)	-0.014*** (0.002)	0.227*** (0.004)	0.284*** (0.003)	-0.015*** (0.002)
- 2017년	0.317*** (0.004)	0.386*** (0.003)	-0.012*** (0.002)	0.313*** (0.004)	0.385*** (0.003)	-0.012*** (0.002)
- 2018년	0.406*** (0.004)	0.491*** (0.003)		0.401*** (0.004)	0.490*** (0.003)	
지역더미 (수도권 대비)						
- 영남권	-0.122*** (0.003)	-0.124*** (0.005)	-0.066*** (0.009)	-0.121*** (0.003)	-0.124*** (0.005)	-0.065*** (0.009)
- 호남권	-0.110*** (0.004)	-0.122*** (0.007)	-0.070*** (0.011)	-0.112*** (0.004)	-0.123*** (0.007)	-0.070*** (0.011)
- 충청권	-0.057*** (0.004)	-0.065*** (0.006)	-0.038*** (0.009)	-0.058*** (0.004)	-0.066*** (0.006)	-0.038*** (0.009)
- 강원권	-0.035*** (0.008)	-0.047*** (0.011)	-0.023 (0.016)	-0.037*** (0.008)	-0.047*** (0.011)	-0.022 (0.016)
- 제주권	0.113*** (0.012)	0.012 (0.018)	-0.060** (0.025)	0.104*** (0.012)	0.009 (0.018)	-0.064** (0.025)
상수항	-1.913*** (0.019)	-0.991*** (0.024)	-5.541*** (0.041)	-1.830*** (0.019)	-0.966*** (0.023)	-5.515*** (0.041)
관측치 수	924,818	924,818	924,818	924,818	924,818	924,818
차수 수		188,779	188,779		188,779	188,779
Hausman 검정 통계량		22,820.82*** [0.000]			23,075.56*** [0.000]	

주: 1) () 안은 표준오차이며, [] 안은 p-값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신용자 더미는 고신용자 기준임. 신용자 더미(고신용자 1, 중신용자 2, 저신용자 3)

4) 연도더미는 2015년이 기준임: 2015년 '0', 2018년 '1'

5) 지역더미는 수도권이 기준임: 수도권 '1', 영남권 '2', 호남권 '3', 충청권 '4', 강원권 '5', 제주권 '6'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담보대출의 청산이나 상환이 있을 경우 고신용자는 소비지출을 통제하여 내부화하고 있지만 중신용자의 경우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처럼 중신용자의 경우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의 경우 부채상환으로 소비지출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회귀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면, 부채 유입과 유출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가계부채의 신규유입이나 기존부채가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해당 부채를 활용한 소비지출 증가가 보다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유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는 전반적인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s)이 발생할 수 있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소비지출 감소세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V. 결론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 등으로 가계부채의 이와 같은 동태적 특성(dynamic features)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고는 2015년 한국은행에서 구축한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시도이다. 가계부채 DB는 기존의 서베이 자료와 달리 100만여 개인차주의 신용정보 금융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분기 패널자료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은행 가계부채 DB」가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도(精度) 높은 분석 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을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이라는 유량(flow) 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변화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유입’이었다. 특히 이를 세분하면 기존 대출보다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신용등급별로 더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로 고신용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수축기에 있어서 중·저신용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신용계층과 달리 저신용자들의 경우 가계부채 확장기나 수축기에 관계없이 순유출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가 건전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신용평가에 기반하여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신용평점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생애 첫 주택마련자들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규대출 축소가 신용평점기준 강화와 같은 은행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수축기의 경우 확장기에 비해 은행들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강화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가 중요한 신규대출 기준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감축기의 미국과 달리 이러한 신용평가 기준이 가계부채 수축기에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연구와 차별화되게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를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이러한 유량변수의 변화가 가계 소비지출의 대응변수인 신용카드 이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계부채의 유입과 유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유입의 감소는 중·저신용자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크게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유입이 감소할 경우 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고소득 계층에 비해 중·저소득계층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계부채의 유입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부채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유입 감소가 있을 경우 미국에서와 같은 소비지출 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다. 따라서 향후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유지해 나가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경험에서 보았듯이 급격한 부채 유입 감소가 소비위축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준·박현서·김미라 (2018),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조사통계월보 9월, 한국은행 pp. 16-48.
- 노형식·송민규 (2017), 제3장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대출 상품의 설계, 송민규 편, KIF 연구총서, 2017-01, 한국금융연구원.
- 유경원 (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관한 평가: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Mimeo.
- 유경원·황진태 (2017), 우리나라 가계의 동태적 부채보유 행태에 대한 분석, 통계연구, 제22권 제4호, 통계청, pp. 50-74.
- 이동진 (2019), 부채누증 속도 및 누증 정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과다부채 실물경제간 관계분석, 응용경제, 제22권 제2호, pp. 5-41.
- 정호성 (2017),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 BOK 경제연구 제2017-6호, 한국은행.
- _____ (2018),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18-5호, 한국은행.
- 한국경제연구학회 (2019), 소득DB 구축방안 연구,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Mimeo).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대출자 특성에 따른 리스크 및 소비변화, Near & Future INSIGHT, Vol. 11,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17), 가계부채DB 설명자료, 내부자료.
- 함준호·김정인·이영숙 (2010), 「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4호, pp. 1-34.
- Bhutta, N. (2015), The Ins and Outs of Mortgage Debt During the Housing Boom and Bust, Vol. 76, pp. 284-298,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 Dynan, K. E. and D. L. Kohn (2007) "The Rise in U.S. Household Indebtedness: Causes and Consequences," paper prepared for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Conference 2007.
- Habibullah, Shah, Smith, and Azman-Saini (2006), "Testing Liquidity Constraints in 10 Asian Developing Countries: An Error-Correction Model Approach," *Applied Economics*, Vol. 38, pp. 2535-2543.
- Karasulu, M. (1991),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08/255*.

-
- Mian A. and A. Sufi (2009), The Consequences of Mortgage Credit Expansion: Evidence from the U.S. Mortgage Default Cri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4, Issue 4, November, pp. 1449-1496.
 - Mian A. and A. Sufi (2011), House Prices, Home Equity-Based Borrowing, and the US Household Leverage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 No. 5, August, pp. 2132-2156.
 - _____ (2015), *House of Deb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ice, F. J. Beckers and G. L. Cava (2019), The Effect of Mortgage Debt on Consumer Spending: Evidence from Household-level Data, Research Discussion Paper, RDP 2019-06, Reserve Bank of Australia.
 - Song, S (2019), The Cash-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BOK 경제연구 2019-20호
 - UBS (2018), *Shifting Asia: The Road to Cashless Societies*, UBS Chief Investment Office GWM Independent Investment Research.

〈 부 록 〉

부표 1. 빅데이터의 분류

사회관계망 자료 (social networks)	거래내역 자료 (traditional business systems)	사물인터넷 자료 (internet of th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 블로그, 코멘트 • 개인문서 • 사진 • 동영상(유튜브 등) • 인터넷 검색 • 모바일 데이터 • 사용자 생성 지도 •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생성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 기업 생성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거래 - 은행/증권 기록 -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 데이터 (고정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자동화 - 기후/오염 센서 - 교통센서/웹캠 - 과학센서 - 보안/감시용 - 비디오/사진 (이동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위치 - 자동차 - 위성사진 •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 - 웹로그

출처: UNECE(2013), Classification of Types of Big Data

부표 2. 가계부채 관련 정책 일지*

*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던 2005년 하순 이후의 주요 내용을 정리

시기	정책의 주요 내용
2005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현행 0.15%→ 2009년까지 1.0%로 인상 -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차주의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녀 DTI를 40% 이하로 제한, 미혼자녀 주택대출금지
2006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대책 ('05.8.31 조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 내 6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시 DTI 40% 적용
2006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보험)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 적용 대상 폐지: 60 → 40% * 10년·6억 초과 실수요 주택대 - 비은행 LTV 규제 강화 60~70%→50%이내 (단 10년 초과·6억 이내 아파트는 60% 적용) - DTI 적용범위 확대: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아파트
2007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대 리스크관리 강화('06.11.15)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 2건 이상 주택대 차주에 대한 대출 건수 축소 유도 - 복수대출 규제* 적용 기관 확대: 은행 → 전 금융기관 * 투기지역내 동일차주 주택대 1건 제한 -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선: 외형 비중 축소 → 수익성 지표 보강
2008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3구 외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토지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이 포함
2008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극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대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주택가격 하락분 담보 보완 보증, 은행권 대출금리 합리화, 환승론 지원대상 채무 상한 확대(1천 → 3천만원)

2009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7.7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 수도권 전지역 LTV 강화: 60%→50% 이내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추가 지도 (9.7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I 적용대상지역 확대: 투기지역(강남3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 지역 포함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10.12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 LTV 강화(보험: 60%→50% 이내, 저축은행 70%→60%) - DTI 적용대상: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2010	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및 투기지역 지정 수도권 제외 전지역의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자 대출에 한해 DTI을 LTV 한도내에서 은행 자율로 운영(DTI 한시적 폐지) - 대상주택 확대: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및 2억원까지 주택자금 지원 등
2011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안정대책-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 공공 보유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 공급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자금(연리2%) 건설자금 한시 특별지원 -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 6개월이상 무주택자 대출조건 폐지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으로 완화됐던 DTI 축소분 환원(3월말 종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 2011년말까지 연장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예대출 준수시한 단축) - 대출구조 개선: 고정금리대출 전환 유도(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거처 대출 주담대 확대
2012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 예대출 관리 강화(80% 이내 운용) -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 및 은행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 ** 일반 주택담보대출: 1.4%→2.8%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거치식, 다중채무자 대출): 1.4%→4.0%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중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무주택근로자, 은퇴자 DTI 규제 완화 - DTI 규제 보완방안: 소득 인정범위 확대(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 6억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도 DTI가산·감면 항목 적용
2013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매입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 생애주택에 취득세 면제 - 민간 공급의 촉진을 위해 공공분양 감소(연 7만 가구→5만 가구) -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채무조정
2014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담대 금리·상환구조 개선, 전세대출 안정화, 신용대출 채무조정,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강화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을 2017년말까지 158%p 수준 관리 -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40% 수준 확대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70% 일괄적용), 청약통장 일원화

2015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조원 규모 고정금리, 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상품 개발(1,2차)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개편(주담대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은행 인센티브 부여) -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분할상환 확대: 원칙적 분할상환 취급 -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유도 -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 중심 심사 - 상호금융권 비주택대출 등 관리 강화: 리스크 감소요인만 상향 허용, 최저한도 60%에서 50%로 축소
	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확보,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하여 대출한도 산정
2016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 2017년말까지 분할상환 비중 50% 목표 상향 조정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가계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공급 억제: LH 공급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 공급물량 감축 - 집단대출 억제: 종전 1인당 각각 2건까지 가능하던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를 보증 주체와 무관하게 합계 2건으로 축소 - 분할상환 유도: 원금거치식 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유도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2017.1월) - 상호금융 등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2017.1/4분기)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
2017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일부터)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추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 조정대상지역내 LTV·DTI 강화: LTV 70%→60%; DTI 60%→50% -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외 21개구 민간택지 적용 전매제한기간을 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대책(실수요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가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의 LTV·DTI 비율 하향 조정 - 양도소득세 종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상('18.4월 시행)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DTI*('18.1말 시행), 전금융권 DSR('18.10월 시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 모두 반영 - 가계대출 쓸림 억제: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 정비(12월) - 참고지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등 도입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 및 소각 등

2018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과도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자본규제부담 상향 조정 - 가계·기업부문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 조정(가계: 100%→115%, 기업: 100%→85%)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증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 세 부담 상향 조정: 150%→300%
2019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 연계형 신용회복위원회 주담대 채무조정 도입 -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분류 개선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등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6.17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금융권 업관차주 특성 고려, 금융접근성 제약 않는 범위에서 관리지표 수준 설정 * 평균DSR 기준, '카드사(60%) → 보험회사(70%) → 캐피탈사(90%) → 저축은행(90%) → 상호금융(160%)' 순 차등 설정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7.8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채무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 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부표 3. 기술분석: 주택담보대출 기준 (소득계층, 연령대, 지역별)

〈부표 a〉 소득계층별 연간 주택담보대출량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936,975	15.6	1,934,587	11.1	479,776	28.1	745,038	25.4	871,305	28.9	218,265	-3.0
2014	1,231,675	31.5	2,149,208	11.1	614,800	28.1	934,606	25.4	1,123,547	28.9	211,725	-3.0
2015	1,423,802	15.6	2,886,644	34.3	794,994	29.3	1,243,543	33.1	1,385,025	23.3	353,031	66.7
2016	1,469,107	3.2	2,423,214	-16.1	789,558	-0.7	1,344,821	8.1	1,557,004	12.4	442,230	25.3
2017	1,332,975	-9.3	2,345,171	-3.2	760,500	-3.7	1,122,963	-16.5	1,185,170	-23.9	321,225	-27.4
2018	1,250,131	-6.2	1,956,871	-16.6	647,521	-14.9	1,027,634	-8.5	996,400	-15.9	325,524	1.3
대출청산 차주												
연도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850,574	12.5	1,168,173	14.2	397,649	-5.5	870,965	-6.8	807,139	1.8	183,629	22.4
2014	956,664	4.1	1,333,608	8.1	375,952	28.0	811,624	-1.9	821,489	6.7	224,723	-11.0
2015	995,960	-2.0	1,442,191	10.9	481,329	-12.0	796,319	11.7	876,623	0.1	200,049	20.1
2016	975,808	7.5	1,239,571	0.9	423,794	12.3	889,252	13.0	877,699	8.7	240,318	36.2
2017	1,049,111	18.8	1,375,255	2.1	476,005	7.4	1,004,477	7.2	953,893	7.2	327,362	8.9
2018	1,246,441	12.5	1,387,678	0.9	486,232	2.1	1,078,670	7.4	1,022,975	7.2	356,595	8.9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소득 등급의 경우 1~5등급은 고소득층, 6~10등급은 중소득층, 11~15등급은 저소득층으로 정의함.

〈부표 b〉 연령대별 연간 주택담보대출량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고연령		중연령		저연령		고연령		중연령		저연령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329,729	1,762,249	1,260,410	225,595	1,150,084	459,214						
2014	385,188	2,123,659	20.5	1,491,471	18.3	243,007	7.7	1,497,743	30.2	529,128	15.2	
2015	617,184	2,651,539	24.9	1,837,659	23.2	324,806	33.7	1,891,889	26.3	764,912	44.6	
2016	501,975	2,333,415	-12.0	1,846,489	0.5	392,414	20.8	1,962,959	3.8	988,682	29.3	
2017	498,931	2,208,755	-5.3	1,739,631	-5.8	280,361	-28.6	1,613,815	-17.8	735,182	-25.6	
2018	423,768	1,798,600	-18.6	1,632,155	-6.2	283,629	1.2	1,296,153	-19.7	769,776	4.7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연도	고연령		중연령		저연령		고연령		중연령		저연령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450,692	1,507,732	487,392	227,260	1,277,018	361,852						
2014	490,698	8.9	1,660,300	10.1	533,225	9.4	319,883	40.8	1,189,445	-6.9	356,166	-1.6
2015	679,466	38.5	1,672,869	0.8	590,861	10.8	305,524	-4.5	1,229,336	3.4	339,742	-4.6
2016	561,241	-17.4	1,564,398	-6.5	529,975	-10.3	313,703	2.7	1,318,253	7.2	377,473	11.1
2017	616,684	9.9	1,690,931	8.1	611,228	15.3	368,895	17.6	1,445,089	9.6	472,797	25.3
2018	659,209	6.9	1,768,800	4.6	698,736	14.3	448,781	21.7	1,497,245	3.6	513,732	8.7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연령의 경우 20~30대는 저연령층, 40~50대는 중연령층, 60~70대는 고연령층으로 정의함.

〈부표 c〉 지역별 연간 주택담보대출량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신규 차주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1,716,357	26.9	885,586	13.4	209,255	20.1	321,756	2.6	56,177	-0.3	30,231	-23.9		
2014	2,178,019	40.7	1,004,334	14.0	251,252	8.4	330,001	21.0	55,982	39.3	45,516	97.7		
2015	3,064,935	-8.8	1,144,569	-14.4	272,454	40.2	399,284	352.041	78,006	-17.8	44,213	-2.9		
2016	2,796,661	-4.7	979,812	-3.3	276,508	33.6	380,338	-17.1	75,538	9.5	43,116	-2.5		
2017	2,666,448	-17.2	784,747	-17.2	369,470		315,415		82,688		57,131	32.5		
						대출증가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887,638	29.4	526,311	26.3	112,472	-11.8	177,048	27.8	33,881	-1.1	9,533	7.9		
2014	1,148,998	32.9	664,633	42.5	99,178	66.3	226,258	11.7	33,495	-27.4	10,288	43.0		
2015	1,526,918	20.3	946,929	-4.6	164,910	13.3	252,840	10.0	24,301	43.4	14,711	169.2		
2016	1,836,165	-22.4	903,039	-25.2	186,869	-11.4	278,148	-13.2	34,841	82.1	39,607	-41.8		
2017	1,425,020	-12.7	670,999	-2.4	165,648	-3.6	241,421	-23.5	63,438	-14.6	23,040	-47.7		
2018	1,243,553		654,784		159,711		184,711		54,170		12,051			
						대출잔산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1,411,860	6.2	490,141	15.3	133,447	27.9	183,711	17.8	34,097	24.3	9,374	158.4		
2014	1,499,473	14.0	565,317	15.8	170,634	5.6	216,412	-1.7	42,371	-3.4	24,219	-32.7		
2015	1,709,324	-14.3	654,919	-5.0	180,133	-14.5	212,838	9.6	40,946	-1.2	16,307	46.0		
2016	1,465,211	13.3	622,413	5.5	154,099	8.8	233,321	10.9	40,450	-24.5	23,815	30.9		
2017	1,660,743	3.3	656,559	2.0	167,615	34.4	258,687	23.4	30,533	46.3	31,180	-18.1		
2018	1,715,965		669,615		225,299		319,191		44,664		25,547			
						대출감소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1,194,125	-5.5	351,729	10.0	67,009	47.3	135,160	15.6	20,232	16.4	10,296	-53.3		
2014	1,128,042	-1.6	386,981	11.7	90,377	-8.4	156,187	7.3	23,557	5.6	13,420	178.9		
2015	1,109,445	6.5	432,191	9.2	104,609	15.7	167,530	-4.6	24,878	33.7	9,755	-27.3		
2016	1,181,761	13.1	472,133	10.7	133,836	27.9	159,850	25.4	33,252	-5.9	16,733	71.5		
2017	1,336,123	10.3	522,682	0.8	146,207	9.2	200,516	-2.0	31,281	19.9	32,002	91.3		
2018	1,473,197		527,099		146,207		196,572		37,504					

주: 1) 대출잔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지역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영남권; 광주, 전북, 전남은 호남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충청권; 제주는 제주권으로 정의함.

부표 4. 기술분석: 은행 담보대출 기준 (전체, 신용등급, 소득계층, 연령대, 지역별)

<부표 d> 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

연도	총량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금액	증감률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17,389,738		1,102,375		1,217,575		934,577		1,270,683	
2014	18,720,414	7.7	1,438,739	30.5	1,557,399	27.9	989,970	5.9	1,262,673	-0.6
2015	21,809,042	16.5	1,911,887	32.9	2,104,298	35.1	945,988	-4.4	1,316,306	4.2
2016	23,399,553	7.3	1,429,751	-25.2	2,292,114	8.9	1,108,657	17.2	1,434,495	9.0
2017	24,028,906	2.7	1,454,339	1.7	1,842,575	-19.6	1,143,477	3.1	1,544,107	7.6
2018	24,395,912	1.5	1,379,320	-5.2	1,762,968	-4.3	1,218,332	6.5	1,638,530	6.1

(단위: 십만 원, %)

<부표 e> 신용등급별 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대출청산 차주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814,517		263,744		284,528	
2014	1,121,652	37.7	289,363	9.7	277,228	-2.6
2015	1,479,020	31.9	391,850	35.4	339,907	22.6
2016	1,200,444	-18.8	214,690	-45.2	357,047	5.0
2017	1,260,228	5.0	183,709	-14.4	207,235	-42.0
2018	1,202,359	-4.6	171,406	-6.7	206,100	-0.5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603,728		224,634		237,731	
2014	618,787	2.5	239,084	6.4	203,202	-14.5
2015	697,563	12.7	190,265	-20.4	196,206	-3.4
2016	869,306	24.6	184,335	-3.1	215,855	10.0
2017	938,042	7.9	152,070	-17.5	193,923	-10.2
2018	1,034,173	10.2	142,880	-6.0	146,015	-24.7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603,728		224,634		237,731	
2014	618,787	2.5	239,084	6.4	203,202	-14.5
2015	697,563	12.7	190,265	-20.4	196,206	-3.4
2016	869,306	24.6	184,335	-3.1	215,855	10.0
2017	938,042	7.9	152,070	-17.5	193,923	-10.2
2018	1,034,173	10.2	142,880	-6.0	146,015	-24.7

(단위: 십만 원, %)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신용등급의 경우 1~3등급은 고신용층, 4~6등급은 중신용층, 7~10등급은 저신용층으로 정의함.

〈부표 f〉 소득계층별 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소득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소득
2013	511,664	496,561	94,150	556,114	541,486	119,975	6.2	
2014	724,252	544,377	170,110	698,042	731,938	127,419	81.5	
2015	925,559	816,033	49,9	1,034,013	956,909	231,286	16.6	
2016	717,250	542,250	-33.6	823,142	787,969	231,464	-14.2	
2017	692,933	574,765	6.0	846,616	672,665	243,687	5.3	
2018	732,842	496,479	-13.6					
연도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소득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소득
2013	519,685	337,035	72,846	651,302	515,400	103,406	28.1	
2014	569,839	335,350	81,825	589,188	539,784	132,420	0.9	
2015	497,987	366,602	79,282	618,300	563,321	133,625	17.3	
2016	608,316	388,823	110,259	680,036	597,306	156,777	30.9	
2017	623,386	411,228	105,147	688,087	650,445	205,194	14.9	
2018	650,061	420,096	145,445	776,206	626,039	235,748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소득등급의 경우 1~5등급은 고소득층, 6~10등급은 중소득층, 11~15등급은 저소득층으로 정의함.

〈부표 g〉 연령대별 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연령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연령
2013	80,637	594,518	427,220	138,299	771,469	307,807	23.5	
2014	106,828	822,348	509,563	149,646	1,027,635	380,118	52.4	
2015	159,310	1,105,919	646,658	212,320	1,312,567	579,411	27.7	
2016	106,978	716,192	-35.2	228,328	1,324,098	739,688	27.7	
2017	104,305	763,448	6.6	179,530	1,119,117	543,928	-26.5	
2018	97,450	671,324	-12.1	209,528	966,927	586,513	7.8	
연도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연령	증가액	감소액	증가율	저연령
2013	104,127	602,176	228,274	144,125	865,487	261,071	-6.2	
2014	124,148	646,223	219,599	202,074	815,813	244,786	-2.4	
2015	127,911	597,664	220,413	200,354	876,934	239,018	18.4	
2016	166,791	689,903	15,4	211,627	939,844	283,024	9.6	
2017	134,071	656,197	353,209	236,135	997,815	310,157	10.7	
2018	157,978	718,247	342,107	283,434	1,011,684	343,412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연령의 경우 20~30대는 저연령층, 40~50대는 중연령층, 60~70대는 고연령층으로 정의함.

〈부표 h〉 지역별 연간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차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702,574	38.5	203,551	29.4	61,492	-2.6	93,646	7.5	13,268	-6.1	8,892	-28.2
2014	973,001	33.4	263,435	19.3	59,900	31.6	100,715	26.2	12,457	97.2	6,383	143.2
2015	1,298,184	-24.4	314,338	-30.8	78,840	29.6	127,135	-33.1	24,562	17,872	15,525	-69.9
2016	981,344	-2.2	217,613	15.7	102,193	74,244	114,774	34.9	21,121	18.2	4,670	247.6
2017	959,482	-4.8	237,196	-5.8	86,628	16.7	103,826	-9.5	22,809	8.0	11,097	-31.6
2018	913,055											
	대출증가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666,436	34.3	314,390	24.3	69,384	-17.0	108,615	35.5	21,985	0.5	3,534	96.5
2014	894,971	34.8	390,861	44.9	57,585	75.9	147,214	11.6	22,085	-27.3	6,946	1.6
2015	1,206,455	10.4	566,256	4.3	101,281	-8.4	164,357	14.1	16,062	19.7	7,057	145.7
2016	1,332,294	-20.0	590,560	-25.2	92,764	11.4	187,514	-15.0	19,233	73.0	17,338	-50.4
2017	1,066,041	-6.9	441,875	8.4	92,926	-10.0	159,427	-20.4	33,266	-5.5	8,606	-9.4
2018	992,850		478,860				126,869		31,423		7,794	
	대출청산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638,522	6.1	144,811	18.4	45,401	-12.9	65,905	7.2	13,164	-31.6	3,163	24.0
2014	677,565	-10.0	171,468	3.7	39,543	21.7	70,633	5.5	9,002	20.6	3,921	170.0
2015	610,050	12.3	177,798	15.6	48,126	6.2	74,515	52.8	10,857	90.2	10,585	-5.5
2016	685,159	6.2	205,478	6.0	51,098	-3.6	113,850	-10.7	20,652	-58.8	10,005	63.4
2017	727,486	7.4	217,867	-9.4	49,243	54.1	101,707	33.7	8,505	53.3	16,353	-71.7
2018	781,656		197,445		75,898		136,010		13,039		4,635	
	대출감소 차주											
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851,251	-4.4	229,614	4.4	40,178	65.2	78,273	9.4	13,635	-14.7	6,354	-54.6
2014	813,443	4.7	239,727	6.4	66,387	-19.0	85,613	21.5	11,635	71.7	2,884	36.1
2015	851,838	8.4	255,135	10.8	53,806	24.9	104,006	-2.8	19,978	13.5	3,926	61.5
2016	923,110	4.3	282,601	16.4	67,226	11.9	101,131	23.9	22,684	-34.8	6,339	18.3
2017	963,070	10.8	329,024	-0.8	75,220	6.9	125,340	-18.2	14,788	21.7	7,499	52.4
2018	1,067,436		326,263		80,380		102,574		18,001		11,428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주택담보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지역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영남권; 광주, 전북, 전남은 호남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충청권; 제주는 제주권으로 정의함.

부표 5. 기술분석: 전체 가계대출 기준 (전체, 신용등급, 소득계층, 연령대, 지역별)

〈부표 i〉 연간 전체 가계대출 추이

연도	총량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금액	증감률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50,744,961		2,976,243		7,266,025	2,163,253	5,976,938			
2014	53,986,272	6.4	3,455,218	16.1	8,113,128	11.7	2,088,877	-3.4	6,314,826	5.7
2015	60,181,638	11.5	4,379,196	26.7	10,422,774	28.5	2,510,069	20.2	6,067,986	-3.9
2016	67,013,758	11.4	4,337,233	-1.0	11,235,246	7.8	2,234,039	-11.0	6,437,218	6.1
2017	71,602,389	6.8	4,036,357	-6.9	10,343,913	-7.9	2,507,645	12.2	7,205,760	11.9
2018	75,466,861	5.4	4,142,635	2.6	10,096,105	-2.4	2,547,024	1.6	7,649,899	6.2

(단위: 십만 원, %)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전체 가계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부표 j〉 신용등급별 연간 전체 가계대출 추이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고신용		저신용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1,893,933		893,405		3,893,057		2,749,072		623,896			
2014	2,418,227	27.7	853,657	-4.4	4,877,872	25.3	2,680,574	-2.5	549,210	-12.0		
2015	3,193,765	32.1	986,082	15.5	6,511,331	33.5	3,327,437	24.1	583,877	6.3		
2016	3,242,356	1.5	927,907	-5.9	7,229,337	11.0	3,510,728	5.5	494,793	-15.3		
2017	3,201,881	-1.2	680,115	-26.7	7,153,246	-1.1	2,779,684	-20.8	410,583	-17.0		
2018	3,335,265	4.2	655,861	-3.6	7,179,998	0.4	2,560,144	-7.9	355,953	-13.3		

연도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고신용		저신용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감소액	감소율
2013	1,496,772		337,385		3,077,031		1,600,613		1,297,869			
2014	1,665,486	11.3	229,965	-31.8	3,460,058	12.4	1,557,911	-2.7	1,296,544	-0.1		
2015	2,006,478	20.5	265,929	15.6	3,538,741	2.3	1,525,759	-2.1	998,114	-23.0		
2016	1,848,247	-7.9	189,933	-28.6	4,021,160	13.6	1,538,972	0.9	876,221	-12.2		
2017	2,178,359	17.9	173,812	-8.5	4,675,082	16.3	1,673,451	8.7	856,860	-2.2		
2018	2,252,129	3.4	161,660	-7.0	5,165,351	10.5	1,645,860	-1.6	837,799	-2.2		

(단위: 십만 원, %)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전체 가계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신용등급의 경우 1~3등급은 고신용층, 4~6등급은 중신용층, 7~10등급은 저신용층으로 정의함.

〈부표 k〉 소득계층별 연간 전체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증가액	감소율	증가율	저소득	증가액	증가율	중소득	증가율
2013	556,525	24.0	1,841,607	575,158	2,678,345	3,616,358	961,031	7.2
2014	690,300	14.7	2,113,407	649,392	3,147,594	3,921,248	1,030,248	30.2
2015	791,769	18.0	2,672,312	911,411	3,888,119	5,181,648	1,341,038	23.4
2016	934,544	-5.6	2,518,498	880,788	4,297,174	5,263,757	1,654,523	-8.4
2017	882,114	5.2	2,285,046	858,821	3,916,013	4,890,206	1,516,155	-1.0
2018	927,803	15.9	2,336,404	869,406	3,938,519	4,633,481	1,500,565	18.3
연도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감소율	증가율	저소득	증가액	감소율	중소득	감소율
2013	540,207	3.2	1,092,276	492,415	2,413,692	2,708,076	730,042	11.0
2014	557,660	-7.7	1,101,833	401,711	2,493,753	2,838,101	863,604	14.1
2015	716,741	28.5	1,280,913	481,621	2,360,925	2,794,750	810,732	11.0
2016	661,891	2.3	1,116,335	425,722	2,550,630	2,870,270	925,012	11.0
2017	677,329	15.9	1,219,785	578,125	2,880,991	3,211,124	1,026,608	15.5
2018	785,150	4.1	1,269,950	466,699	3,105,872	3,250,827	1,185,824	15.5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전체 가계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소득등급의 경우 1~5등급은 고소득층, 6~10등급은 중소득층, 11~15등급은 저소득층으로 정의함.

〈부표 l〉 연령대별 연간 전체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대출증가 차주			
	증가액	증가율	증가율	저연령	증가액	증가율	중연령	증가율
2013	332,092	22.1	1,395,980	1,248,171	706,519	4,381,708	2,177,798	10.8
2014	405,397	55.8	1,598,925	1,450,896	826,921	4,872,719	2,413,488	29.8
2015	631,704	-9.6	2,043,360	1,704,132	1,070,875	6,218,317	3,133,582	15.6
2016	570,758	-1.1	1,956,481	1,809,994	1,229,440	6,382,217	3,623,589	-4.9
2017	564,440	1.3	1,742,352	1,729,565	1,115,421	5,780,994	3,447,498	3.9
2018	571,860	4.7	1,682,304	1,888,471	1,163,639	5,350,822	3,581,644	14.1
연도	대출청산 차주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감소율	증가율	저연령	증가액	감소율	중연령	감소율
2013	557,175	-14.8	1,104,472	501,606	785,644	3,887,474	1,303,820	3.9
2014	474,464	61.7	1,216,241	526,477	1,014,130	3,900,935	1,354,393	-6.2
2015	767,351	-26.2	1,156,949	510,447	1,141,462	3,932,967	1,270,603	7.3
2016	688,709	4.7	1,268,338	550,598	1,254,884	4,350,012	1,362,789	17.5
2017	720,887	1.6	1,248,533	577,604	1,396,120	4,427,752	1,826,027	14.1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전체 가계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연령의 경우 20~30대는 저연령층, 40~50대는 중연령층, 60~70대는 고연령층으로 정의함.

〈부표 m〉 지역별 연간 전체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만 원, %)

연도	신규 차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1,421,454	785,705	211,485	292,308	46,382	26,899						
2014	1,804,700	862,596	236,383	270,732	67,775	36,369						
2015	2,363,271	1,113,868	331,447	357,474	83,951	43,074						
2016	2,381,131	1,004,919	366,598	348,930	66,574	52,636						
2017	2,350,023	802,565	305,186	344,954	80,544	59,459						
2018	2,348,721	853,384	357,095	309,563	69,475	71,217						
				대출증가 차주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율
연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3,729,167	1,703,529	574,102	758,085	146,390	59,527						
2014	4,139,606	1,997,501	590,813	798,186	189,696	73,017						
2015	5,468,631	2,639,384	810,909	977,058	207,165	152,842						
2016	6,033,059	2,693,974	803,433	1,082,040	224,195	172,048						
2017	5,544,449	2,415,318	804,349	951,494	271,090	158,853						
2018	5,548,242	2,166,505	858,236	960,325	251,921	128,567						
				대출청산 차주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율
연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1,087,673	438,506	137,116	151,020	32,836	12,886						
2014	1,064,608	441,634	138,999	150,376	35,721	14,916						
2015	1,410,704	526,885	155,239	176,994	32,679	19,329						
2016	1,189,098	480,154	173,665	184,190	32,027	19,287						
2017	1,244,277	637,447	166,111	228,917	43,536	32,136						
2018	1,402,522	529,633	150,024	232,717	36,303	17,037						
				대출감소 차주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율
연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2013	3,513,285	1,166,813	398,296	496,515	100,721	52,088						
2014	3,683,440	1,284,561	426,951	568,888	106,426	46,488						
2015	3,322,117	1,419,550	455,213	561,471	123,944	52,430						
2016	3,539,377	1,401,215	500,804	656,227	137,962	60,019						
2017	4,031,440	1,532,464	506,059	731,372	143,220	94,412						
2018	4,239,524	1,645,302	631,537	688,550	154,847	126,547						

주: 1) 대출청산 차주와 대출감소 차주의 경우 음(-)의 전체 가계대출을 절대값으로 하여 해당 대출의 감소액으로 표기함.
 2) 지역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영남권; 광주, 전북, 전남은 호남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충청권; 제주는 제주권으로 정의함.

부표 6. 회귀분석: 요약통계량

〈부표 6a〉 프로빗 모형 관련 기술통계량

연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5년	주택담보대출(신규=1)	205,258	0.0	0.1	0.0	1.0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1)	205,258	0.0	0.2	0.0	1.0
	성별(남: 0, 여: 1)	205,258	0.5	0.5	0.0	1.0
	연령	205,258	45.4	16.1	18.0	115.0
	신용점수	205,258	802.9	125.8	0.0	949.0
	실질소득(십만 원)	205,258	307.9	156.0	0.0	1,504.1
	지역	177,563	1.9	1.2	1.0	6.0
2018년	주택담보대출(신규=1)	217,546	0.0	0.1	0.0	1.0
	은행주택담보대출(신규=1)	217,546	0.0	0.2	0.0	1.0
	성별(남: 0, 여: 1)	217,546	0.5	0.5	0.0	1.0
	연령	217,546	46.8	16.7	18.0	114.0
	신용점수	217,546	813.2	127.8	0.0	953.0
	실질소득(십만 원)	217,546	297.5	165.3	0.0	9,527.5
	지역	188,398	1.9	1.2	1.0	6.0
2015년 및 2018년	주택담보대출(신규=1)	422,804	0.0	0.1	0.0	1.0
	은행주택담보대출(신규=1)	422,804	0.0	0.2	0.0	1.0
	성별(남: 0, 여: 1)	422,804	0.5	0.5	0.0	1.0
	연령	422,804	46.1	16.4	18.0	115.0
	신용점수	422,804	808.2	127.0	0.0	953.0
	실질소득(십만 원)	422,804	302.6	160.9	0.0	9,527.5
	지역	365,961	1.9	1.2	1.0	6.0

주: 1) 지역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1;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2;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3;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4; 강원권(강원)은 5; 제주권(제주)은 6임.

〈부표 6b〉 회귀분석 모형 관련 기술통계량

연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3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195,400	116.7	300.5	-33.5	74,138.4
	성별(남: 0, 여: 1)	195,400	0.5	0.5	0.0	1.0
	연령	195,400	44.2	15.5	18.0	113.0
	평균 신용등급	195,400	1.8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187,851	27.6	210.6	0.0	20,488.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187,851	54.5	452.6	0.0	133,368.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195,400	22.1	195.0	0.0	14,55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195,400	41.7	306.3	0.0	70,050.0
	실질소득(십만 원)	195,400	315.2	156.0	0.0	1,527.4
지역	166,227	1.9	1.2	1.0	6.0	
2014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203,081	119.6	364.6	-116.6	92,803.6
	성별(남: 0, 여: 1)	203,081	0.5	0.5	0.0	1.0
	연령	203,081	44.5	15.8	17.0	114.0
	평균 신용등급	203,081	1.7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194,837	32.2	233.9	0.0	17,90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194,837	59.4	346.4	0.0	45,000.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203,081	22.4	196.9	0.0	17,00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203,081	41.4	455.9	0.0	133,606.0
	실질소득(십만 원)	203,081	311.2	154.7	0.0	1,512.5
지역	175,194	1.9	1.2	1.0	6.0	
2015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207,797	125.4	305.6	-35.0	64,256.6
	성별(남: 0, 여: 1)	207,797	0.5	0.5	0.0	1.0
	연령	207,797	45.1	16.2	18.0	115.0
	평균 신용등급	207,797	1.7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201,888	40.1	282.6	0.0	22,00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201,888	73.3	416.5	0.0	47,555.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207,797	23.2	200.9	0.0	32,37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207,797	41.3	352.6	0.0	77,370.0
	실질소득(십만 원)	207,797	306.7	158.8	0.0	1,498.8
지역	180,909	1.9	1.2	1.0	6.0	
2016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211,542	133.7	336.4	-12.9	67,560.0
	성별(남: 0, 여: 1)	211,542	0.5	0.5	0.0	1.0
	연령	211,542	45.5	16.4	17.0	116.0
	평균 신용등급	211,542	1.6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206,638	38.8	276.2	0.0	18,20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206,638	75.4	438.6	0.0	43,684.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211,542	22.1	190.8	0.0	14,28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211,542	41.0	297.4	0.0	34,500.0
	실질소득(십만 원)	211,542	303.0	163.5	0.0	9,749.9
지역	183,382	1.9	1.2	1.0	6.0	

(계속)

연도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7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215,616	141.9	391.8	-76.1	95,554.0
	성별(남: 0, 여: 1)	215,616	0.5	0.5	0.0	1.0
	연령	215,616	46.0	16.6	18.0	113.0
	평균 신용등급	215,616	1.6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210,327	33.6	253.5	0.0	27,73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210,327	68.4	363.0	0.0	27,903.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215,616	24.1	217.6	0.0	31,715.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215,616	45.0	322.1	0.0	50,215.0
	실질소득(십만 원)	215,616	300.3	164.9	0.0	9,611.7
지역	186,735	1.9	1.2	1.0	6.0	
2018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219,356	150.9	406.2	-72.5	95,476.6
	성별(남: 0, 여: 1)	219,356	0.5	0.5	0.0	1.0
	연령	219,356	46.2	16.6	18.0	110.0
	평균 신용등급	219,356	1.6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213,711	29.0	219.0	0.0	15,00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213,711	66.6	350.9	0.0	22,294.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219,356	25.5	223.2	0.0	27,73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219,356	46.5	306.8	0.0	32,025.0
	실질소득(십만 원)	219,356	298.1	165.3	0.0	9,443.0
지역	187,923	1.9	1.2	1.0	6.0	
2013~ 2018년	연간 실질 신용카드 이용액(십만 원)	1,252,792	131.8	354.5	-116.6	95,554.0
	성별(남: 0, 여: 1)	1,252,792	0.5	0.5	0.0	1.0
	연령	1,252,792	45.3	16.2	17.0	116.0
	평균 신용등급	1,252,792	1.7	0.7	1.0	3.0
	주택담보대출 유입(십만 원)	1,215,252	33.6	247.9	0.0	27,730.0
	전체가계대출 유입(십만 원)	1,215,252	66.5	396.2	0.0	133,368.0
	주택담보대출 유출(십만 원)	1,252,792	23.3	204.8	0.0	32,370.0
	전체가계대출 유출(십만 원)	1,252,792	42.9	343.8	0.0	133,606.0
	실질소득(십만 원)	1,252,792	305.5	160.8	0.0	9,749.9
지역	1,080,370	1.9	1.2	1.0	6.0	

주: 1) 평균 신용등급의 경우 고신용 1, 중신용 2, 저신용 3임.

2) 지역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1;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2;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3;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4; 강원권(강원)은 5; 제주권(제주)은 6임.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국민계정통계는 경제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간 경제수준 비교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신상품 등장, 기존 상품 사양화 등으로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국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주기적으로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에 한국은행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준년 개편 과정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분배 국민소득 통계 제공 확대, 정부계정 개선, 분류체계 재정비, 기타 추계방법 개선 등의 작업도 수행하였다.

2015년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유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계정 주요지표와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GDP 등 총량지표를 1953년부터 소급·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장기 시계열 분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 기준년 개편 필요성

II. 기준년 개편 연혁 및 개편대상 계열

III. 주요 개편 내용

IV. 주요 경제지표의 신·구계열 비교

V. 주요 경제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변화 추이

VI. 기대 효과

I. 기준년 개편 필요성

국민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지출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순환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국민경제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의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이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은 경제동향 분석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국가간 경제수준 비교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은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상품 등장, 기존 상품 사양화 등으로 국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준년 개편을 통해 현실반영도를 높여야 한다.¹⁾ 2015년 기준년 개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2010년 이후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체계 및 생산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교년 국민계정 추계시 기준년 부가가치율 및 최종수요율을 적용하는 부문의 경우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경제현상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게 되는데 기준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실측 산업연관표(I-O) 작성 결과와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의 구조 및 규모 등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주요 기초통계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비교년 국민계정 추계에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물가통계와 산업생산지수 등과 같은 주요 기초통계의 기준년과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국민계정과 여타 기초통계를 보다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통상적인 기준년 개편의 필요성 이외에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높이는 등 최근의 경제환경과 통계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1) 국민계정은 주요 기초자료의 작성주기에 맞추어 통상 5년(0, 5로 끝나는 연도)마다 기준년이 개편된다. 호주(매년)와 영국(3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다.

II. 기준년 개편 연혁 및 개편대상 계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1957년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편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계정은 1953년 UN이 발표한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 1953 SNA)」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 후 1968년 UN이 국민경제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1968 SNA」를 완성하고 회원국에 이 체계에 의한 국민계정 편제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대 국민계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서비스화 및 세계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93년 UN은 「1993 SNA」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5년 및 2000년 기준년 개편시 이를 이행하고 2005년 기준년 개편시에는 연쇄가중법과 지출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계정의 현실적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R&D 등 무형자산의 확대, 다국적기업의 확산과 같은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UN은 「2008 SNA」를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2010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2008 SNA」를 이행하고 2014년 5월부터는 국민대차대조표를 편제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5대 국민계정을 완성하였다. 한국은행은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대내외 통계수요에 부응하고자 분배국민소득 및 정부계정을 강화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한편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11회에 걸쳐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변경되었으며 이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은 제12차 개편에 해당한다.

〈표 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연혁

개편회차	기준년	공표연도	대상기간	비고
	1955년	1958년	1953~1957년	· 1953 SNA에 의거 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1982년	
	1980년	1986년	1980~1984년	
	1980년	1987년	1970~1985년	· 1968 SNA 이행
6차	1985년	1989년	1970~1987년	· 4대 국민계정 작성(국민대차대조표 제외) ·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년	1994년	1970~1992년	
8차	1995년	1999년	1970~1997년	· 1993 SNA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2002년	· 1993 SNA 이행 완료
10차	2005년	2009년	1970~2007년	· 연쇄가중법 및 지출접근법 도입
11차	2010년	2014년	1953~2013년	· 2008 SNA 이행 · 5대 국민계정 작성(국민대차대조표 작성) · 공표 시계열 확장(1970년 → 1953년)
12차	2015년	2019년	1953~2018년	· 분배 국민소득 및 정부계정 강화 등

2015년 기준년 개편은 1953년 이후의 계열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자료 여건 및 추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제1단계 개편으로 2000~18년중 종합계정, 2010~18년중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과 15개 부표를 먼저 작성하여 2019년 6월에 공표하였다. 제2단계 개편에서는 1953~99년중 종합계정, 1975~2009년중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과 18개 부표를 작성하여 2019년 12월에 공표하였다.

〈표 2〉 통계표별 공표 시계열 및 수정내역

통계표	공표 시계열		수정 내역
	1차 개편	2차 개편	
I. 종합계정			
1. 국내총생산과 지출	00~18년	70~99년	
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00~18년	70~99년	
3. 자본거래	00~18년	70~99년	
4. 국외거래	00~18년	70~99년	
II.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10~17년	00~09년	
III.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소득발생계정	10~17년	..	
본원소득분배계정	10~18년	75~09년	수정 ¹⁾
2차소득분배계정	10~18년	75~09년	
현물소득재분배계정	10~18년	75~09년	
소득사용계정	10~18년	75~09년	
IV.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10~17년	75~09년	
〈부표〉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00~18년	53~99년 ²⁾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0~18년	53~99년 ²⁾	
3.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00~17년	70~99년	
4.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10~18년	70~09년	
5. 자본재형태별 주체별 총자본형성	00~18년	70~99년	
6-1.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	70~17년	수정 ³⁾
6-2.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	05~17년	수정 ³⁾
7.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	05~18년	
8.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18년	수정 ⁴⁾
9.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99년	
10.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00~18년	70~99년	
1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00~17년	70~99년	
12.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10~17년	70~09년	
13.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10~17년	70~09년	
14.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10~18년	70~09년	
15.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10~17년	07~09년	
16. 국외거래	00~18년	70~99년	수정 ⁵⁾
17. 총저축과 총투자	00~18년	70~99년	

주 : 1) 1차 개편 시계열 대상 일부 항목 추가

2) 분기는 1960~99년

3) 제목 수정 및 일부 항목 삭제

4) 분류기준 변경으로 1차 개편 시계열 전체가 2차 개편시 수정됨

5) 일부 항목 삭제

III. 주요 개편내용

금번 제12차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정부계정 개선, 분류체계 재정비, 기타 추계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다.

1.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기준년을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를 적용하였고 부분분류를 재정비하여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였다.²⁾ 그리고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산업별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추계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년으로 개편된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소비자·수출입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여 주요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켰다.

〈표 3〉 국민소득통계 주요 기초자료의 기준년(2015년) 개편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개편완료시기	주요 이용부문
■ 생산·출하·재고지수	통계청	2018. 3월	제조업 생산 및 재고증감 추계 등
■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2018. 3월	서비스업 생산 추계 등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2016.12월	디플레이터 산정
■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2019. 5월	"
■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2019. 5월	"

2) 기준년 변경에 따른 상대가격체계, 부분분류체계, 생산기술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2010년 기준년) 모든 연간 및 분기 명목·실질 시계열을 2015년 기준년으로 소급, 개편하였다.

2.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비소프트웨어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하여 SNA 이행 수준을 높이고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였다. 한편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은 이미 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4〉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처리방법 변경(비용 → 자산) 예

		(기존)			(개편후)		
		GDP	지출GDP		GDP	지출GDP	
			소비	투자		소비	투자
생산 GDP	산출액(A)	200			200		
	중간투입(B)	150			130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20)			[-20]		
분배 GDP	부가가치(A-B)	50	30	20	70	30	40
	- 피용자보수	30			[+20]		[+20]
	- 총영업잉여	20			40		[+20]

주 : [] 내는 개편후 증감액

3.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단, 포착 필요성과 추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대상을 개인간 거래(P2P)로 한정하고 이를 가계가 생산·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³⁾ 미국, 일본 등 주요

3) 기초자료 여건,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포착 필요성과 추계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을 선정하였다.

국도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공유 경제가 아닌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로 분류하고 있다.⁴⁾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방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상호간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⁵⁾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5〉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

		(억원)			
		2015	2016	2017	2018
전체(A+B)		204	581	1,356	1,978
		〈0.001〉	〈0.004〉 (184.9)	〈0.008〉 (133.5)	〈0.011〉 (45.9)
기포착(A)		167	429	821	1,181
미포착(B)		37	152	534	798

주 : 1) 〈 〉 내는 GDP(기초가격 총부가가치 기준) 대비 비중(%)
 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외 논의 참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방식의 정도를 제고하고 포괄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요국의 디지털경제와 관련한 위성계정 및 공급사용료 개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⁶⁾하면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디지털·공유 경제 관련 행정자료, 기업 및 가계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공유 경제 관련 국제적 합의가 마련될 경우 국민소득통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4) 우리나라에서 B2C 형태로 운영되는 차량공유와 금융기관에 의해 중개되는 P2P 대출 등은 디지털화된 사업 모델로서 디지털·공유 경제 포괄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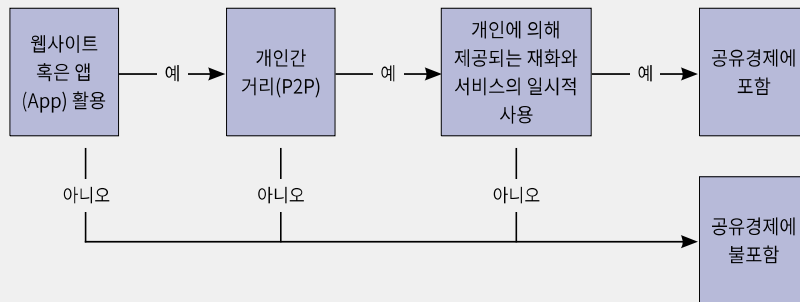
5) 세부 내용은 <참고 1> 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참고 2>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참조.

6)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계정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으로서 디지털경제 위성계정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디지털경제 공급사용료를 개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참고 1>

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 영국 통계청은 IMF 통계포럼(2017년)에서 ① 디지털 중개플랫폼 의존성, ② 개인간 거래 여부, ③ 일시적 사용(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공유경제를 식별하는 의사결정트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



자료 :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sharing economy(Pauline Beck, 2017 Fifth IMF Statistical Forum)

〈참고 2〉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은 공유경제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등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창출된 재화 및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P2P)를 공유경제로 인식

▪ **미 국** : *BEA did not attempt to include partially digital items in the preliminary estimates or in these updated estimates. This means that some components of the digital economy, like peer-to-peer (P2P) e-commerce, also known as the sharing economy, are excluded from both sets of estimates.*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n Update Incorporating Data from the 2018 Comprehensive Update of the Industry Economic Accounts, **BEA, 2019.4월**)

▪ **일 본** :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공유경제를 개인 등이 보유하는 유휴자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으로 파악. 공유서비스로 불리는 임대업 등은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検討会議 第二次報告書(案), 내각부, 2019.4월)

▪ **캐나다** : *The sharing economy—which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facilitated by digital platforms where people rent their skills and make their resources available for money—has the potential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anadian economy. In an attempt to measure its impact, Statistics Canada asked people living in Canada the extent to which they used or offered peer-to-peer ride services and private accommodation services.* (The sharing economy in Canada, **Statistics Canada, 2017.2월**)

▪ **영 국** : We define the sharing economy as, “the sharing of under-used assets through completing peer-to-peer transactions that are only viable through digital intermediation, allowing parties to benefit from usage outside of the primary use of that asset.” (...)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is definition is likely to evolve alongside our understanding of how to measure sharing-economy activities.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sharing economy, **ONS, 2017.9월**)

4.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⁷⁾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 (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⁸⁾하였으며, 추후에도 연간 확정시 가계 혼합소득을 공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8 SNA에서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의 경우 피용자보수,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혼합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표 6〉 가계 혼합소득의 신설

기존	개편후	비고
[본원소득분배계정(원천) 가계 영업잉여]	[본원소득분배계정(원천) 가계 영업잉여 (혼합소득)]	신설

정부의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이외에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과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⁹⁾의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ECOS(경제통계시스템, Economic Statistics System)를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¹⁰⁾

〈표 7〉 가계, 기업, 정부소득의 비중 공표 범위

	기존	개편후	비고
■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기준 비중	미공표	공표 ¹⁾	신설
■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비중	공표 ²⁾	공표 ²⁾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비중	미공표	공표 ¹⁾	신설

주 : 1) ECOS로 공표
2) 보도자료, ECOS로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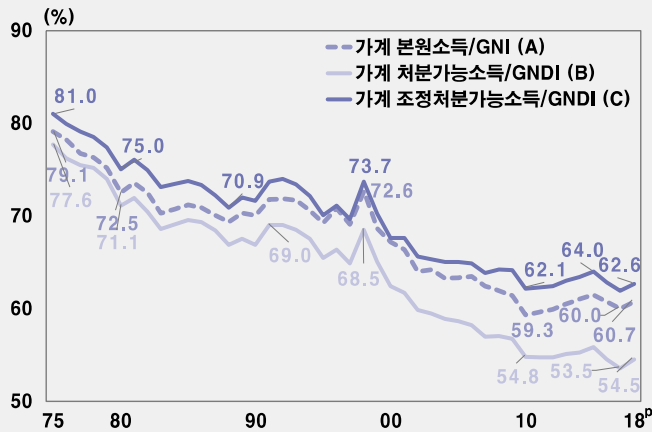
7) 2019년 5월말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중 32개국이 공표하고 있다.
 8) 우리나라의 가계 혼합소득은 2010~17년중 65~68조원 수준이며, 2011~15년중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중 증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주거서비스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잉여까지 포함한, 가계 영업잉여 총액을 공표하였다.
 9)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 국외순취경상이전 =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 사회적현물이전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한편 사회적현물이전은 국내 제도부문간 거래로서 국민경제 전체로는 0이 된다.
 10) 다양한 기준의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활용한 간단한 분석의 예는 <참고 3> 가계소득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을 참조.

〈참고 3〉

가계소득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

-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가계소득의 비중은 모두 197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

국민소득 지표별 가계소득 비중



- 한편 2000년대 이후 각 지표간 가계소득의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국민총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간 차이(B-A)는 주로 경상세, 사회부담금 등 가계에서 정부로의 현금이전을 의미
 -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간 차이(C-B)는 의료보험, 무상보육 등 정부에서 가계로의 현물이전을 나타냄

가계소득의 비중 변화와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활동

	(기간중 연평균, %)					
	75~79	80~89	90~99	00~09	10~18 ^p	75~18 ^p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기준 ¹⁾ (A)	77.1	71.1	70.6	63.7	60.4	67.8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²⁾ (B)	75.7	69.3	67.1	59.0	54.8	64.2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 GNDI) 기준 ³⁾ (C)	79.2	73.5	71.9	65.3	62.7	69.7
가계와 정부간 소득이전 (C-A, %p)	2.1	2.3	1.3	1.6	2.4	1.9
가계에서 정부로의 현금이전 (B-A, %p)	-1.4	-1.8	-3.5	-4.8	-5.6	-3.6
정부에서 가계로의 현물이전 (C-B, %p)	3.5	4.2	4.8	6.3	8.0	5.5

주 : 1)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 본원소득(피용자보수 + 총영업잉여 + 순재산소득)의 비중
 2)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 G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중 가계 처분가능소득(가계 본원소득 - 경상세 - 사회부담금 + 사회수혜금 + 순기타경상이전)의 비중
 3)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중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 처분가능소득 + 순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

5. 정부계정 개선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¹¹⁾ 2008 SNA에서는 가계가 보건 또는 교육 등을 위한 지출을 한 후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 사회보험수혜금이나 피용자보수의 일부가 아닌 정부의 보건(교육)서비스 지출로 포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¹²⁾ 등이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로 인해 정부소비 규모는 확대되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 규모는 축소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다.

〈표 8〉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의 주요 항목

기존	개편후	2015년 규모
건강보험 급여비, 직업훈련비, 국공립 초·중고 무상급식, 국공립대 국가장학금 등	좌동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¹²⁾ 등	12.7조원

또한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하였다. 한편 이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의 차감항목인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순생산 및 수입세가 줄어들지만 동 감소분만큼 영업잉여가 확대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다.

11) 정부소비(정부의 최종소비) = 정부 총산출(정부의 서비스생산) - 상품비상품판매(민간에 일정가격으로 판매한 정부의 서비스생산) + 사회보장현물수혜(정부가 구입하여 가계에 무상으로 현물 지급한 민간의 서비스생산)

12)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에 대해 제공하는, 지불을 보증하는 증표로서 수요자가 결제시 특정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자는 동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여 자금을 수취한다. (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화·체육·여행바우처 등)

6. 분류체계 재정비

가. 경제활동별 분류 조정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였다. 기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 장비 제조업(예: 전지, 태양광 모듈 등)을 신설하였다. 건설업 분류기준을 ‘공사종류’에서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건물건설, 토목건설에 포함되어 있던 전문건설업을 신설하고 기존 건축수선을 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에 통합하였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농림어업서비스업은 축산업, 임업, 어업에 통합하였다. 이외에도 다음 표와 같이 경제활동 분류를 변경하고 명칭 등을 수정하였다.

〈표 9〉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분류기준

기존	개편후	비고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농림어업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통합 ¹⁾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추가 ²⁾ 신설 ³⁾ 추가 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가스, 증기 및 운수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 토목건설	건설업 건물건설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설 ⁵⁾ 통합 ⁶⁾
건축수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통신업 출판, 방송, 영화, 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통신업 출판, 방송, 영상, 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추가 ⁷⁾ 추가 ⁸⁾ 추가 ⁹⁾ 추가 ¹⁰⁾ 신설, 추가 ¹¹⁾ 신설

주 : 1) 개편후 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각각 통합
 2) 기존 정밀기기 제조업을 포함
 3) 기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서 분리
 4) 기존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포함
 5) 기존 건물건설, 토목건설에서 분리
 6) 개편후 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각각 통합
 7) 기존 통신업의 우편업을 포함
 8) 기존 각 산업의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포함
 9) 기존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 및 용품 임대를 포함
 10) 기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사회보장을 포함
 11) 기존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여행관련서비스업을 포함

나.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새 분류기준 이행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을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였다. 참고로 COICOP은 UN이 제정한 목적별 분류에 의한 가계소비 분류체계(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로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 소비를 거래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0〉 가계소비 목적별 분류(중분류 기준)의 명칭 변경 및 분류 이동

	기존	개편후	비고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2	주류 및 담배	주류 및 담배	-
3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
4	임료 및 수도광열	임대료 및 수도광열	명칭 변경
5	가계시설 및 운영	가계시설 및 운영	-
6	의료보건	의료보건	-
7	교통	교통	분류 이동('우편서비스'는 기존 '통신'에서 '교통'으로 이동)
8	통신	정보 통신	명칭 변경 및 분류 이동('음향, 영상수신, 기록 및 재생기기'는 기존 '오락문화'에서 '정보 통신'으로 이동)
9	오락문화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명칭 변경
10	교육	교육 서비스	명칭 변경
11	음식숙박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명칭 변경
12	기타	기타	-

다. 통계표 정비

국외거래 통계표(부표) 항목 중 국제수지통계, 자금순환표에서 각각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수입, 국외 금융자산/부채 순증의 하위항목을 삭제하여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하였다.

〈표 11〉 개편후 국외거래 통계표(부표)

항목	비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f.o.b.) 서비스 국외수취 요소소득 국외로부터의 피용자보수 국외로부터의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로부터의 경상이전 수취(A)	하위항목 삭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재화(f.o.b.) 서비스 국외지급 요소소득 국외에 대한 피용자보수 국외에 대한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에 대한 경상이전 지급(B)	하위항목 삭제
경상계정잉여(C=A-B)	
순자본이전(D)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E)	
오차 및 누락(F=G-(C+D-E))	
자금과부족(G=H-I)	
국외 금융자산 순증(H)	하위항목 삭제
국외 부채 순증(I)	하위항목 삭제

또한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하여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높였다. 경제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총자본형성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활동별 연구개발은 ECOS로만 공표하기로 하였다.

7. 기타 추계방법 등 개선

각 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별도로 추계하고, 주거서비스 생산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소득통계(생산계정)와 국민대차대조표(순자본소득)간 제도부문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추계방법도 개선하였다.

IV. 주요 경제지표의 신·구계열 비교

1. 경제규모

2015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1,658조원으로 구계열(1,564조원)에 비해 94조원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표 신계열 등 기초자료 확충과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등 추계방법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경제규모의 신계열과 구계열간 차이는 기준년에서 과거로 갈수록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2〉 명목GDP 신·구계열 및 베이스업률 (조원)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p
신계열 (A)	0.05	0.25	3	40	201	652	1,323	1,658	1,893
구계열 (B)	0.05	0.25	3	39	198	635	1,265	1,564	1,782
베이스업금액 (A-B)	0.00	0.00	0	0	3	16	57	94	111
베이스업률 ((A-B)/B, %)	0.0	0.0	0.1	0.6	1.4	2.6	4.5	6.0	6.2

한편 금번 베이스업률은 6.0%로 과거 개편시(1980~2010년중 기준년 개편 평균 7.4%)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13〉 과거 기준년 개편시 베이스업률¹⁾ (%)

기준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980~2010 평균
베이스업률	8.4	7.1	3.9	7.2	10.9	6.8	7.8	7.4

주 : 1) (개편후 GDP - 개편전 GDP) ÷ 개편전 GDP

2. 1인당 국민소득

2015년 신계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미달러화 기준)은 28,814달러로 구계열(27,171달러)에 비해 1,643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명목GDP 규모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1인당 GNI의 3만달러 상회시기는 종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표 14〉

1인당 GNI 신·구계열

	(미달러)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2018 ^p
신계열 (A)	67	80	258	1,699	6,601	12,179	23,118	28,814	31,734	33,434
구계열 (B)	67	80	257	1,686	6,505	11,865	22,105	27,171	29,745	31,349
신-구 차이 (A-B)	0	0	0	12	97	313	1,012	1,643	1,990	2,084

2015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미달러화 기준)은 16,038달러로 구계열(15,487달러)에 비해 550달러 증가하였다.

〈표 15〉

1인당 PGDI 신·구계열

	(미달러)						
	1975 ¹⁾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신계열 (A)	477	1,215	4,427	7,600	12,611	16,038	16,919
구계열 (B)	472	1,193	4,340	7,462	12,235	15,487	16,573
신-구 차이 (A-B)	5	22	87	137	376	550	346

주 :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작성 시작년도인 1975년부터 공표

3. 경제성장률

기준년 개편 결과 1954~2018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7.2%로 구계열 성장률 7.1%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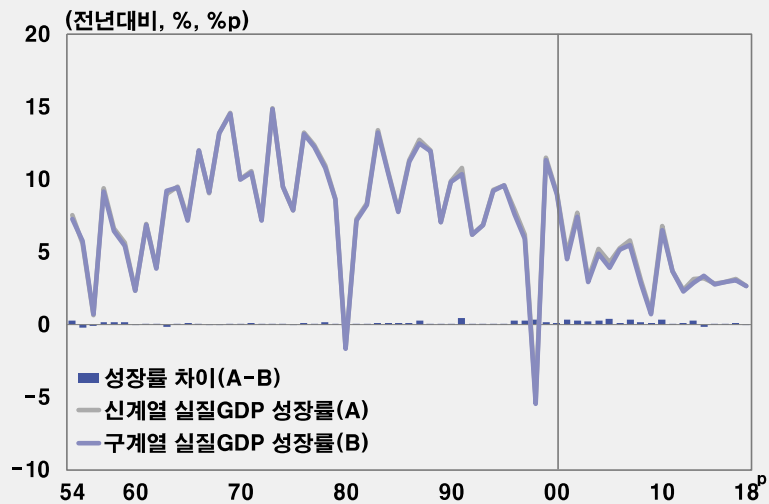
〈표 16〉

실질GDP 성장률 신·구계열

	(기간중 연평균, %)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신계열 (A)	5.9	8.7	10.5	8.8	7.2	4.9	3.4	7.2
구계열 (B)	5.8	8.7	10.4	8.7	7.0	4.7	3.3	7.1
신-구 차이 (A-B, %p)	0.1	0.0	0.1	0.1	0.2	0.2	0.1	0.1

〈그림 1〉

실질GDP 연간 성장률 신·구계열



4.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시기별로 신·구계열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5년 총저축률은 36.4%로 구계열(35.6%)에 비해 0.8%p, 국내총투자율은 29.5%로 구계열(28.9%)보다 0.6%p 상승하였다.

〈표 17〉 총저축률¹⁾ 및 국내총투자율²⁾ 신·구계열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p
총저축률	신계열 (A)	10.9	8.1	18.5	25.2	38.9	34.2	35.2	36.4	35.8
	구계열 (B)	10.9	8.1	18.4	25.4	39.3	34.4	35.0	35.6	34.8
	신-구 차이 (A-B, %p)	0.0	0.0	0.1	-0.3	-0.3	-0.3	0.2	0.8	1.0
국내총투자율	신계열 (C)	14.7	9.7	25.6	34.1	39.5	33.1	32.6	29.5	31.4
	구계열 (D)	14.7	9.7	25.7	34.6	39.5	33.2	32.1	28.9	30.4
	신-구 차이 (C-D, %p)	0.0	0.0	0.0	-0.4	-0.1	-0.1	0.5	0.6	1.0

주 : 1)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최종소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 국내총투자율 = 총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가계순저축률도 신·구계열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기간중 가계소비가 가계소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수정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18〉 가계순저축률¹⁾ 신·구계열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신계열 (A)		4.6	-3.2	3.1	8.6	21.2	6.5	2.8	8.4	6.5
구계열 (B)		4.6	-3.3	2.7	8.2	21.7	8.4	4.1	8.1	7.6
신-구 차이 (A-B, %p)		0.0	0.1	0.4	0.4	-0.6	-1.9	-1.3	0.2	-1.1

주 : 1) 가계순저축률 = $\frac{\text{가계순저축}}{\text{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 \text{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표 19〉

가계순저축률 구성항목별 변동

(조원)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7
가계 소득 ¹⁾	신계열 (A)	0.0	0.2	2.2	29.0	139.9	416.0	786.2	1,026.3	1,097.7
	구계열 (B)	0.0	0.2	2.2	28.3	137.0	407.7	757.4	973.2	1,053.7
	신-구 차이 (A-B)	0.0	0.0	0.0	0.7	2.9	8.3	28.8	53.1	44.1
가계 소비 ²⁾	신계열 (C)	0.0	0.2	2.1	26.5	110.3	388.9	764.4	940.5	1,026.5
	구계열 (D)	0.0	0.2	2.1	26.0	107.2	373.3	726.3	894.0	973.6
	신-구 차이 (C-D)	0.0	0.0	0.0	0.5	3.1	15.7	38.1	46.6	53.0
가계 순저축	신계열 (E)	0.0	0.0	0.1	2.5	29.6	27.0	21.9	85.8	71.2
	구계열 (F)	0.0	0.0	0.1	2.3	29.8	34.4	31.1	79.3	80.1
	신-구 차이 (E-F)	0.0	0.0	0.0	0.2	-0.2	-7.4	-9.3	6.5	-8.9

주 : 1) 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기준
 2) 가계 실제최종소비(가계 최종소비 + 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 기준

5. 경제구조

2015년 기준으로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구계열 59.4% → 신계열 60.6%)과 건설업(5.2% → 5.3%)의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29.8% → 29.0%) 등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제조업에 주로 포함되어 있던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이 서비스업(사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가운데 센서스 등 기초자료가 확충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졌다.

지출측면에서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5.8% → 6.0%)와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0.4% → 0.5%)의 GDP 대비 비중이 각각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센서스 등 기초자료 변경 등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민간소비(49.3% → 48.5%) 등 여타 부문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분배측면에서는 영업잉여(26.0% → 27.0%), 피용자보수(44.7% → 45.2%)의 GNDI 대비 비중이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가 반영되면서 상승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10.2% → 9.4%), 고정자본소모(19.6% → 18.7%)의 비중은 각각 기초자료 반영 및 조세분류 기준 변경, 자산 내용연수 변경 등으로 하락하였다.

〈표 20〉

2015년 기준년의 경제구조

	2015 (신)	2015 (구)	(%) (신-구, %p)
[생산구조¹⁾]			
농림어업	2.2	2.3	-0.1
제조업	29.0	29.8	-0.8
전기가스수도사업	2.7	3.2	-0.4
건설업	5.3	5.2	0.1
서비스업	60.6	59.4	1.2
[지출구조²⁾]			
최종소비지출	63.6	64.3	-0.7
민간	48.5	49.3	-0.8
정부	15.1	15.0	0.1
총고정자본형성	29.0	29.3	-0.3
건설투자	14.5	14.9	-0.4
설비투자	8.6	8.6	0.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0	5.8	0.2
민간	24.7	25.0	-0.3
정부	4.3	4.3	0.0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0.5	-0.4	0.9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3.0	45.3	-2.3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36.1	38.4	-2.2
[분배구조³⁾]			
피용자보수 ⁴⁾	45.2	44.7	0.5
영업잉여 ⁴⁾	27.0	26.0	1.0
고정자본소모	18.7	19.6	-0.9
순생산 및 수입세	9.4	10.2	-0.7
국외순수취경상이전	-0.3	-0.4	0.1

주 : 1) 명목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2) 명목GDP 대비 비중

3) 명목GNDI 대비 비중

4)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포함

V. 주요 경제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변화 추이

1.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2015년 기준년 개편 시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명목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2018년 1,893조원으로 39,665배 확대되었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명목 GNI)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I, 미달러 기준)도 1953년 67달러에서 2018년 33,434달러로 503배 늘어났다.

〈표 21〉 명목GDP와 1인당 GNI^{1),2)}

	명목GDP (조원, 억달러)		1인당 GNI (만원, 달러)	
1953	0.05	(13)	0.24	(67)
1960	0.25	(20)	1.01	(80)
1970	3	(82)	9	(258)
1980	40	(653)	103	(1,699)
1990	201	(2,833)	467	(6,601)
2000	652	(5,764)	1,377	(12,179)
2010	1,323	(11,439)	2,673	(23,118)
2018 ^p	1,893	(17,209)	3,679	(33,434)

주 : 1) 가계,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명목GNI = 명목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인구수(연앙추계인구 기준, 다만 연앙추계인구가 공표되지 않은 1953~59년은 인구 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정)로 나눈 지표
2) () 내는 미달러 기준

1954~2018년중 미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연평균 10.0%) 요인을 분해해 보면 실질소득 증가(6.9%p)와 물가 상승(10.0%p)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5.4%p)은 원화가치 하락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2〉 1인당 GNI 증가율(미달러 기준) 분해¹⁾

	(기간중 연평균, %, %p)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1인당 GNI 증가율	3.6	10.4	22.8	12.9	6.2	6.1	6.4	10.0
① 실질소득 증가(+)	5.9	8.9	9.9	9.0	6.4	4.1	3.8	6.9
② 물가 상승(+)	21.8	15.8	18.7	8.0	6.6	3.3	1.3	10.0
③ 환율 상승(-)	21.1	11.3	4.4	3.0	5.9	0.7	-1.6	5.4
④ 인구 증가(-)	2.9	2.6	1.8	1.2	0.9	0.6	0.5	1.4

주 : 1) 1인당 GNI(미달러 기준) 증가율을 ① 실질GNI 증가율(플러스(+)) 요인, ② GNI 디플레이터 상승률(+), ③ 원·달러 환율 변동률(-), ④ 추계인구 증가율(-)로 분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1인당 PGDI, 미달러 기준)은 1975년 477달러에서 2018년 18,144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1인당 PGDI의 1인당 GNI 대비 비율은 1975년에 77.9%에 달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54.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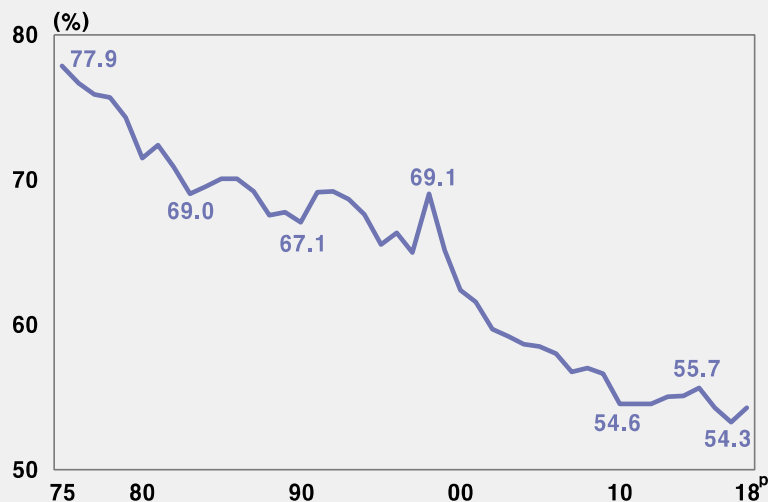
〈표 23〉 1인당 PGDI¹⁾

						(미달러)
1975 ²⁾	1980	1990	2000	2010	2018 ^p	
477	1,215	4,427	7,600	12,611	18,144	

주 : 1) 가계총처분가능소득 = 가계총소득 + 가계순수취경상이전.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득으로 제한적이거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작성 시작년도인 1975년부터 공표

〈그림 2〉 1인당 GNI 대비 1인당 PGDI의 비율



2. 경제성장률 및 실질소득 증가율

우리나라의 1954~2018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은 7.2%로 나타났다. 기간 별로 보면 1950년대 5.9% 이후 1970년대에 10.5%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 2010년대에는 3.4%를 기록하였다. 한편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GDI 증가율은 1980년대, 2010년대에는 유가 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1990~2000년대에는 ICT제품의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GDP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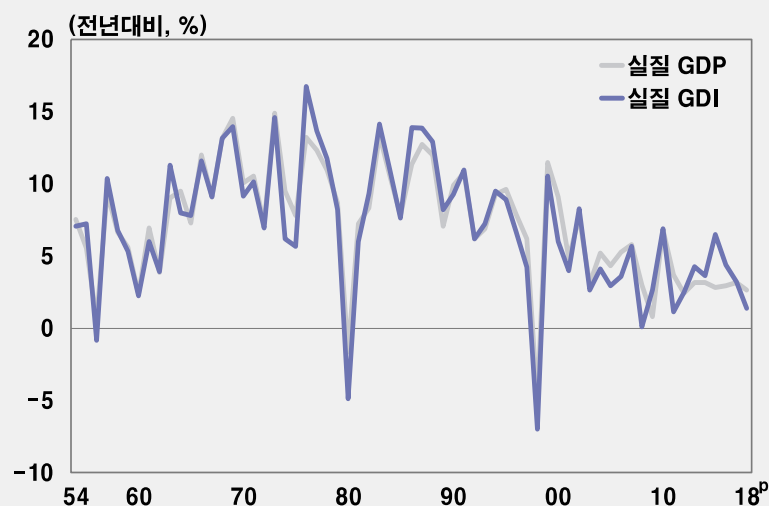
실질GDP 및 실질GDI 성장률

	(기간중 연평균, %)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실질GDP (A)	5.9	8.7	10.5	8.8	7.2	4.9	3.4	7.2
실질GDI1) (B)	5.9	8.6	10.2	9.1	6.5	4.0	3.8	7.0
차이 (B-A, %p)	0.1	-0.1	-0.3	0.3	-0.7	-0.9	0.3	-0.2
교역조건 변화율	1.3	-1.1	-1.2	0.8	-2.2	-2.6	0.8	-0.8
수출 디플레이터	31.8	14.7	13.7	7.0	1.8	0.8	-1.1	8.3
수입 디플레이터	30.1	15.9	15.1	6.2	4.1	3.5	-1.8	9.1

주 : 1)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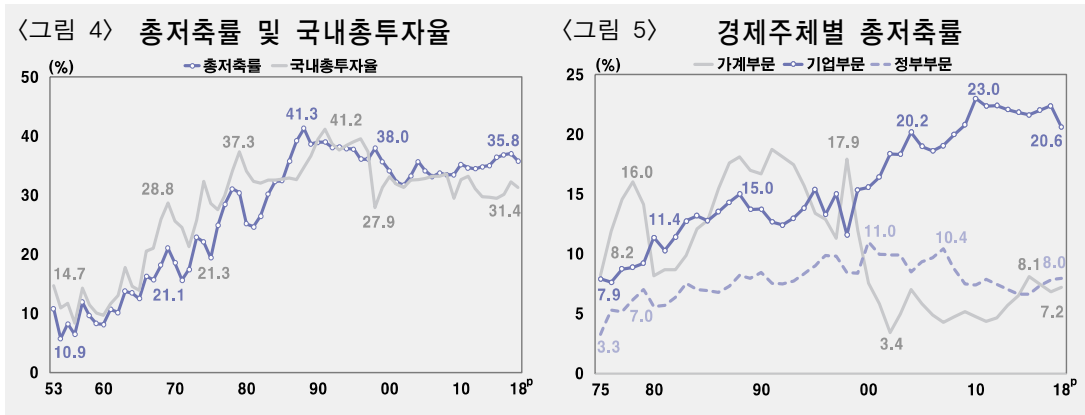
〈그림 3〉

실질GDP 및 실질GDI 연간 성장률



3. 저축률과 투자율

총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1988년 41.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낮아져 2018년에는 35.8%를 기록하였다. 1975~2018년중 경제주체별 총저축률을 살펴보면 기업(7.9% → 20.6%) 부문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가계(8.2% → 7.2%) 부문은 등락을 나타내다가 2000년대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대체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총투자율은 1991년 정점(41.2%)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25〉 경제주체별 총저축률^{1),2)}, 국내총투자율³⁾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총저축률	10.9	8.1	18.5	25.2	38.9	34.2	35.2	35.8
가계	-	-	-	8.2	16.7	7.5	4.8	7.2
기업	-	-	-	11.4	13.7	15.6	23.0	20.6
정부	-	-	-	5.6	8.5	11.0	7.4	8.0
국내총투자율	14.7	9.7	25.6	34.1	39.5	33.1	32.6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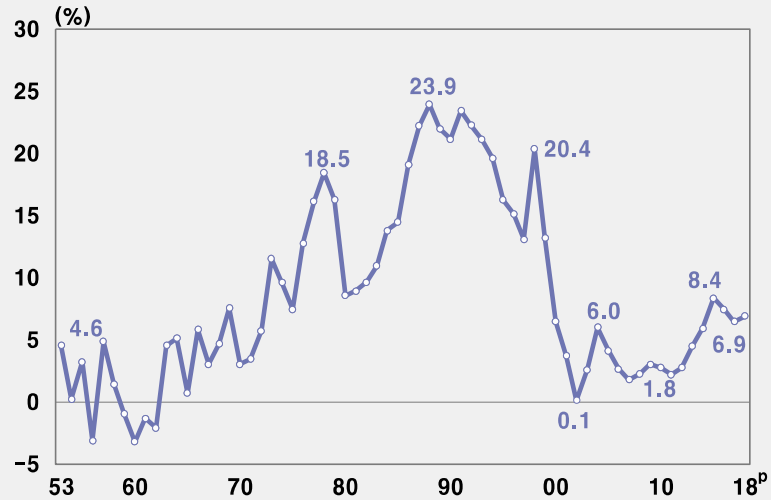
주 : 1) 총저축률 =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최종소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2) 제도부문별 총저축률 = 제도부문별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3) 국내총투자율 = 총자본형성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한편 가계순저축률은 1988년 23.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2년 0.1%까지 낮아졌다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6.9%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 보면 1960~80년대는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가계소비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90~2000년대에는 가

계 소비가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으며 2010년대에는 가계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6〉

가계순저축률



〈표 26〉

가계순저축률¹⁾

(%)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가계순저축률 (%)	4.6	-3.2	3.1	8.6	21.2	6.5	2.8	6.9

주 : 1) 가계순저축률 = $\frac{\text{가계순저축}}{\text{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text{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표 27〉

가계순저축률과 가계소득¹⁾ 및 가계소비²⁾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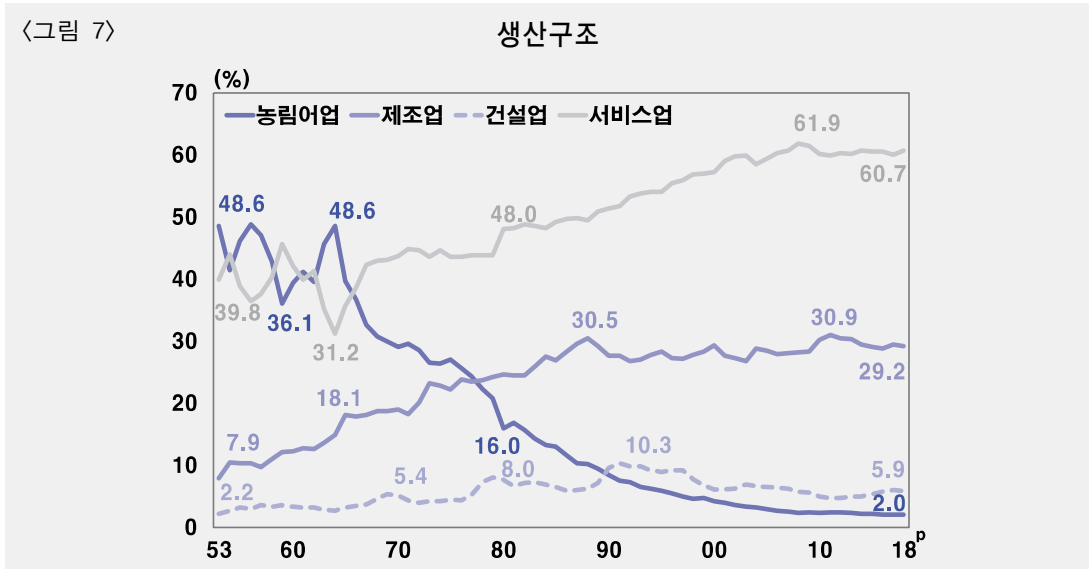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8 ^p	54~18 ^p
가계순저축률 ³⁾	1.5 ⁴⁾	2.5	10.5	15.4	18.6	3.3	5.3	8.5
가계소득 ¹⁾ 증가율 ⁵⁾ (A)	27.3	25.1	30.4	16.9	12.9	6.5	5.0	17.0
가계소비 ²⁾ 증가율 ⁵⁾ (B)	28.5	24.0	29.1	16.1	14.1	7.6	4.5	16.9
차이(A-B, %p)	-1.2	1.1	1.3	0.8	-1.2	-1.2	0.5	0.0
명목GDP 성장률 ⁵⁾	29.1	25.9	30.8	17.7	13.6	7.4	5.1	17.7

주 : 1) 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기준
 2) 가계 실제최종소비(가계 최종소비 + 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 기준
 3) 매년 가계순저축률의 산술평균
 4) 1953~59년 기준
 5) 기간중 연평균

4. 경제구조

가. 생산구조

1953~2018년중 생산구조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의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1953년 48.6%에서 2018년 2.0%로 크게 축소된 반면, 제조업(7.9% → 29.2%)과 서비스업(39.8% → 60.7%)의 비중은 큰 폭 확대되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2000년대 초반 및 1990년대 초반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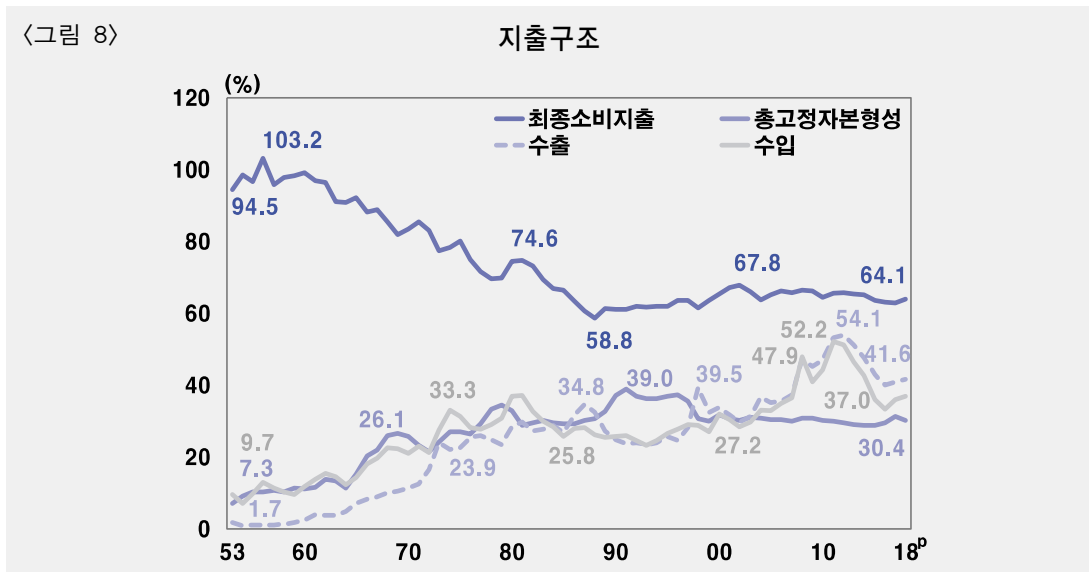
생산구조¹⁾

	생산구조 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농림어업	48.6	39.3	29.0	16.0	8.4	4.3	2.4	2.0
제조업	7.9	12.3	19.0	24.7	27.7	29.3	30.2	29.2
전기가스수도사업	0.4	0.6	1.4	2.3	2.2	2.9	2.1	2.1
건설업	2.2	3.3	5.1	7.7	9.6	6.1	5.0	5.9
서비스업	39.8	42.0	43.8	48.0	51.4	57.2	60.1	60.7

주 : 1) 명목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나. 지출구조

동 기간중 지출구조 변화를 보면 1980년대말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최종소비의 GDP 대비 비중(94.5% → 64.1%)은 민간소비 비중이 1953년 86.5%에서 2018년 48.0%로 하락하였음에도 정부소비 비중이 8.0%에서 16.1%로 높아지면서 1990년대 이후 60%대 중반 수준에서 횡보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7.3% → 30.4%)은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수출(1.7% → 41.6%) 및 수입(9.7% → 37.0%) 비중은 대외교역이 증가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표 29〉 지출구조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최종소비지출	94.5	99.4	83.6	74.6	61.2	65.4	64.6	64.1
민간	86.5	85.1	73.7	62.7	50.2	54.5	50.4	48.0
정부	8.0	14.2	9.9	11.9	11.0	10.9	14.2	16.1
총고정자본형성	7.3	11.2	25.9	32.9	37.3	31.8	30.2	30.4
건설투자	5.5	7.8	17.6	17.7	20.6	15.1	15.2	15.3
설비투자	1.7	3.1	7.7	14.3	14.3	12.4	9.6	8.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1	0.3	0.6	0.9	2.4	4.2	5.4	6.2
민간	-	-	19.7	25.8	32.1	26.4	25.0	25.9
정부	-	-	6.1	7.1	5.3	5.3	5.2	4.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7	2.6	11.4	28.4	25.0	33.9	47.1	41.6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9.7	12.0	21.1	37.1	25.8	32.2	44.3	37.0

주 : 1)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한편 가계소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와 국외소비) 대비 국내소비(거주자 가계의 국내 소비와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의 비율은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증가로 1970년 100.1%에서 2018년 97.9%로 낮아졌다. 국내소비를 형태별로 보면 2000년대까지 서비스 소비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등 재화 소비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이어지다 2010년대 들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30〉 가계소비의 형태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국내소비	100.1	100.3	99.8	99.6	98.2	97.9
내구재	2.3	3.3	10.4	10.8	9.3	10.1
준내구재	12.8	13.3	9.9	9.0	9.0	9.4
비내구재	54.4	49.2	33.4	26.1	22.1	21.4
서비스	30.6	34.5	46.1	53.7	57.8	57.0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0.1	0.4	1.5	1.8	3.1	3.8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	0.3	0.7	1.3	1.4	1.3	1.7

주 : 1) 명목 가계소비(= 국내소비 +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 대비 비중

국내소비를 목적별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등 생활필수품 구입 비중은 꾸준히 낮아진 반면 의료보건, 교통,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비중은 높아졌다.

〈표 31〉 가계소비의 목적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국내소비	100.1	100.3	99.8	99.6	98.2	97.9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39.7	34.5	22.3	13.2	11.0	11.3
주류 및 담배	6.5	6.7	3.6	2.6	1.8	1.9
의류 및 신발	10.7	10.5	7.4	6.5	6.3	6.1
임대료 및 수도광열	9.4	9.2	12.4	19.5	17.4	17.2
가계시설 및 운영	3.1	3.7	5.4	4.0	2.7	3.0
의료보건	2.7	2.6	3.6	2.6	4.0	5.1
교통	6.2	8.7	11.3	11.8	11.0	10.7
정보 통신	1.0	1.8	4.4	7.4	6.1	5.3
오락, 스포츠 및 문화	2.5	2.2	4.2	4.8	6.5	7.0
교육 서비스	2.7	4.3	5.5	5.3	7.1	5.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9.9	8.7	8.3	8.7	9.4	10.1
기타	5.6	7.3	11.4	13.1	14.7	14.8

주 : 1) 명목 가계소비 대비 비중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낮아져 2018년 29.3%까지 하락하였으며, 건설투자 비중은 2000년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내다 이후 50%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진전으로 R&D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표 32〉 총고정자본형성의 형태별 및 주체별 구조¹⁾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건설투자	68.1	53.7	55.2	47.6	50.4	50.3
건물건설	43.0	31.2	37.0	24.5	28.3	37.2
토목건설	25.0	22.5	18.3	23.1	22.1	13.2
설비투자	29.6	43.4	38.3	39.1	31.8	29.3
기계류	17.2	30.2	26.8	29.9	23.9	22.0
운수장비	12.4	13.2	11.5	9.3	7.9	7.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	2.9	6.4	13.2	17.9	20.4
민간	76.3	78.4	85.9	83.3	82.7	85.2
정부	23.7	21.6	14.1	16.7	17.3	14.8

주 : 1) 명목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중

한편 수출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1953년에는 12.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18년에는 82.4%를 기록하였다.

〈표 33〉 수출입의 GNI 대비 비율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총수출 ¹⁾	2.9	3.5	13.8	32.1	26.1	35.4	49.2	43.6
(재화) ²⁾	1.5	1.4	8.5	24.8	21.5	28.9	41.2	36.7
총수입 ³⁾	9.6	11.9	21.5	41.7	26.9	34.3	46.2	38.8
(재화) ²⁾	9.5	10.4	18.4	32.9	22.3	26.9	36.3	29.8
수출입의 GNI 대비 비율 ⁴⁾	12.5	15.4	35.4	73.8	53.0	69.8	95.4	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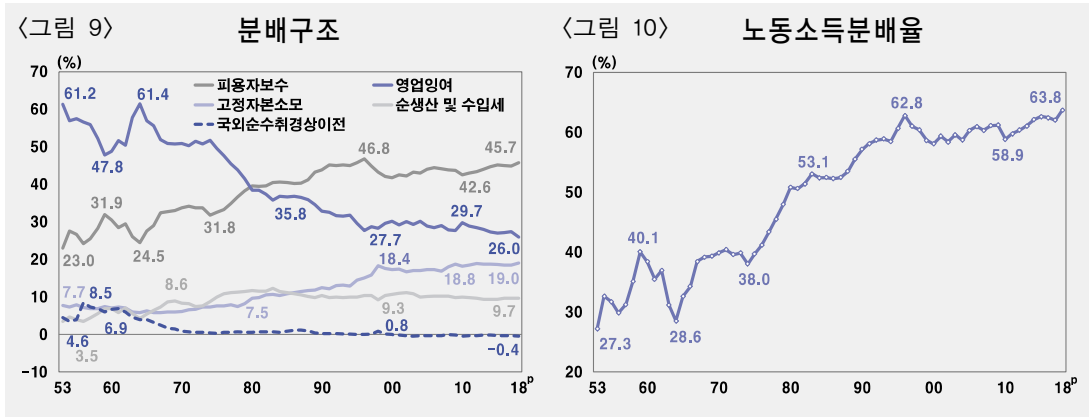
주 : 1) 국외수취요소소득 포함
3) 국외지급요소소득 포함

2) F.O.B. 기준
4) (총수출 + 총수입) ÷ 국민총소득(GNI)

다. 분배구조

1953~2018년중 분배구조의 변화를 보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23.0% → 45.7%)은 임금근로자수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61.2% →

26.0%)은 하락하였다.¹³⁾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도 1953년 27.3%에서 2018년 63.8%로 상승세를 보였다.



〈표 34〉 분배구조¹⁾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p
비용자보수 ²⁾	23.0	30.4	33.8	39.6	43.8	41.8	42.6	45.7
영업잉여 ²⁾	61.2	48.8	50.8	38.4	32.9	30.2	29.7	26.0
고정자본소모	7.7	7.1	6.1	9.6	12.5	17.3	18.1	19.0
순생산 및 수입세	3.5	6.9	8.4	11.7	10.4	10.7	10.0	9.7
국외순수취경상이전	4.6	6.7	0.8	0.6	0.3	0.0	-0.4	-0.4
노동소득분배율 ³⁾	27.3	38.4	39.9	50.8	57.1	58.1	58.9	63.8

주 : 1)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대비 비중

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포함

3) 비용자보수 ÷ (비용자보수 + 영업잉여),

단 국외순수취 비용자보수,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모두 포함

13) 한편 고정자본소모의 비중(7.7% → 19.0%)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축적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Ⅵ. 기대효과

2015년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높임으로써¹⁴⁾ 최근의 경제환경 및 통계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명목GDP 규모, 실질GDP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 등 국민계정 주요지표와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GDP 등 총량지표를 1953년(분기기준 1960.1/4분기)부터 소급·제공¹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장기 시계열 분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분배국민소득반 반장 이관교>

- 14) 가계 혼합소득을 신규 공표하고 경제주체별 소득지표를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하는 등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자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에 부응하였다. 또한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이루어지는 공유경제를 포착함으로써 국민계정체계 내에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범위 확대, 재정통계간 연계성 제고 등 정부계정을 개선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 15) 경제주체별 경제활동의 상세분석 등에 활용되는 제도부문별 소득 및 자본 계정은 1975년부터, 정부계정은 1970년부터 제공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Information on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경제통계시스템(ECOS) 수록 통계

No	통계명칭	내 용
1	통화 및 유동성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본원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말잔)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M2(광의통화)	M2 상품별구성내역(말잔)
		M2 상품별구성내역(평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말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평잔)
		M2 기관별구성내역(말잔)
		M2 기관별구성내역(평잔)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종합표, 말잔)	중앙은행 개관표(말잔)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말잔)
	Lf(금융기관 유동성) 관련통계	Lf 상품별 구성내역(말잔)
		Lf 상품별 구성내역(평잔)
		Lf 기관별 구성내역(말잔)
Lf 기관별 구성내역(평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계절조정계열)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원계열)	
2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화폐발행잔액	화폐발행잔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3	예금/대출금/기타금융	
	예금은행 수신	예금은행 종별예금(말잔)
		예금은행 종별예금(평잔)
		예금은행 예금주별예금(말잔)
		예금은행 기간별 정기예금(말잔)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산업별 대출금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기관 수신(말잔)	

No	통계명칭	내 용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기관 수신(평균)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지역별 여수신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및 여신 생명보험회사 수신 및 여신
	가계신용	가계신용(분기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월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월별)
	기타금융통계	예금은행 예금회전율 금융기관 점포 및 인원현황 은행대출금 연체율 보험계약실적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4	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일별) 시장금리(월, 분기, 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 금리연동대출 비중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5	지급결제	
	어음교환 및 부도	어음교환 및 부도 지역별 어음부도율
	한은금융망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은행공동망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 통계 지급수단별 통계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전자지급서비스
	회계시스템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오전/오후 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여신금융협회)
	금융정보화 통계	은행

No	통계명칭	내 용
	금융정보화 통계	증권 보험 기타
6	증권/재정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주식시장(일별)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투자자별 주식거래 증시주변자금동향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채권거래	채권거래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	주요 국공채 발행 및 잔액
	재정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7	물가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생산자물가지수 - 총지수(1910~1964)(2015=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5=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5=100)
	총산출물가지수(2015=100)	총산출물가지수(2015=100)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2015=100)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수출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수출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수입물가지수(2015=100)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수입물가지수(특수분류)(2015=100) 수입물가지수(품목별)(2015=100) 수입물가지수(용도별)(2015=100)
	기타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KB) 주택전세가격지수(KB) 지역별 지가변동률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상권별 오피스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중대형매장용부동산임대가격지수
8	국제수지/외채/환율	
	국제수지	국제수지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경상수지 S.A.)

No	통계명칭	내 용
	국제수지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결제통화
		수입결제통화
	지역별 국제수지	지역별 경상수지
		지역별 자본수지·금융계정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
		수입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수입물량지수
		교역조건지수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무/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환율	일일환율	
	평균환율, 기말환율	
해외투자/차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투자(신고기준)	
9	기업경기 / 소비자동향 / 경제심리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 전기간)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기업경기실사지수(지역)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월)(2008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분기) (1995년 3분기~2008년 2분기)	
	기대인플레이션율(한국은행, 전국)(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지역)(월)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	
10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주요지표	연간지표
		분기지표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	경제활동별 GDP 및 GNI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GDP 디플레이터	

No	통계명칭	내 용
	생산 및 지출, 소득 및 처분, 자본거래, 국외거래(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자본거래(명목, 연간)
		국외거래(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생산, 소득,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총자본형성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주체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및 투입, 산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	총저축과 총투자(계절조정, 명목, 분기)	
	총저축과 총투자(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정보통신산업(실질)	정보통신산업(계절조정, 실질, 분기)	
	정보통신산업(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11	자금순환	
	2008 SNA기준	금융거래표(2009~)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8~)
	1993 SNA기준(2002~2013)	금융거래표(2003~2013)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2~)
	1968 SNA기준(1975~2005)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68 SNA기준(1969~1974, 연간)	금융거래표(1970~1974)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9~1974)
	1953 SNA기준(1962~1970, 연간)	금융거래표(1963~1970)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2~1970)
12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9~, 전수조사)

No	통계명칭	내 용
	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7~2010)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성장성에 관한 지표	성장성에관한지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2007~2010,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8~2007,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0~1997,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	손익의 관계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의 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	자산·자본의 회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1990~1997,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	생산성에 관한 지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2002~2007,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1998~2006,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1990~1997, 표본조사)

No	통계명칭	내 용
	부가가치의 구성	부가가치의 구성(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부가가치의 구성(2007~2010,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2002~2007,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1998~2006,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1990~199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8~2010,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0~200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9,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7~1998,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0~1996, 표본조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손익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손익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계산서(2008~2010, 표본조사)
		손익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9,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7~1998,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0~1996,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7~2010,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7~2010,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1990~1999, 표본조사)

No	통계명칭	내 용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2012~)
		현금흐름표(2008~2011)
		현금흐름표(1995~2007)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12~)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08~2011)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1995~2007)
	현금흐름비율	현금흐름비율(2012~)
		현금흐름비율(2008~2011)
		현금흐름비율(1995~2007)
	기업경영분석(분기)	성장성에 관한 지표
		손익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의 회전을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1분위
		2분위(중위수)
		3분위
	기업경영분석(지역)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울산		
13	산업연관표	
14	국민대차대조표(2015년 기준년)	
	자산별 자본스톡	자산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자산별 순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자산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자산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명목, 연말기준)
		자산/부채의 증감(명목)
		순자산 증감(명목)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명목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중립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실질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No	통계명칭	내 용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15	대출행태서베이	
	대출태도	대출태도
	신용위험	신용위험
	대출수요	대출수요
16	산업 및 고용	
	산업일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
		설비투자지수
		경기종합지수
	농림어업	농림생산지수
		어획량
		농어가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
		농어가 자산 및 부채
	광업 및 제조업	산업별 생산·출하·재고지수
		재별 제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설비용 기계류 생산지수
		기계수주액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 재고율지수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부문별 전력사용량
		발전전력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국내건설수주액

No	통계명칭	내 용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건축허가현황 건축물착공현황 건설기성액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주택보유수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현황
	서비스업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지수 도소매업 재고액지수 소비재 수입액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고용, 임금, 가계, 사회	경제활동인구 추계인구, 고령인구비율, 합계출산율 고용보험가입현황 농가가계수지 실업급여수급실적 산업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총액 직종별평균임금 노동생산성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소득분배지표
17	거시경제분석 지표	
18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중앙은행할인율 주요국제금리 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상품가격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No	통계명칭	내 용
	주요국제통계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1인당 GNI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
		국내총생산(PPP적용)
		PPP환율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남북한 주요지표비교(남한/북한 비율)		
북한GDP 관련통계	북한GDP 관련통계	

2020년 2/4분기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 동 공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표 일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참조

공표일	시각	대상통계	담당팀
4월	7일(화) 08:00	2020년 2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8일(수) 12:00	2019년중 자금순환(잠정)	자금순환팀
	10일(금) 12:00	2020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0일(금) 12:00	2020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4일(화) 06:00	2020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7일(금) 12:00	2019년중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국제수지팀
	22일(수) 06:00	2020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3일(목) 08:00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국민소득총괄팀
	28일(화) 06:00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8일(화) 12:00	2020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9일(수) 06:00	202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9일(수) 12:00	2020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5월	7일(목) 08:00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3일(수) 12:00	2020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5일(금) 06:00	2020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0일(수) 12:00	2020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금융통계팀
	21일(목) 06:00	2020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1일(목) 12:00	2020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6일(화) 06:00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6일(화) 12:00	2020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7일(수) 06:00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7일(수) 12:00	2020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6월	2일(화) 08:00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국민소득총괄팀
	2일(화) 08:00	2019년 국민계정(잠정)	국민소득총괄팀
	2일(화) 12:00	2020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금융통계팀
	3일(수) 12:00	2019년 기업경영분석(속보)	기업통계팀
	4일(목) 08:00	2020년 4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0일(수) 12:00	2020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0일(수) 12:00	2020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2일(금) 06:00	2020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6일(화) 12:00	2020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기업통계팀
	19일(금) 12:00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23일(화) 06:00	2020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3일(화) 12:00	2019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5일(목) 08:00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	국민소득총괄팀
	26일(금) 06:00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조사팀
	26일(금) 12:00	2020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30일(화) 06:00	2020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30일(화) 12:00	2020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국민계정리뷰』 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수록하여 『국민계정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원고 게재를 희망 하는 분은 다음의 요령에 의거 원고를 작성·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주제〉

- 국민소득,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계절변동조정, 초단기예측, 지수이론, 표본설계 등 국민계정의 편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원고 투고요령 및 게재〉

- 본지의 발간기준일(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참고하여 발간 2개월 전까지 원고 및 파일을 제출
- 원고 제출시 저자의 이력서 및 영문성명,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송부
- 제출된 원고는 행내외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후 『국민계정리뷰』 편집위원회가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원고작성 요령〉

- 원고는 A4용지에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씨 크기는 본문 11, 각주 9의 크기로 하여 행간은 160으로 설정하고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 원고의 처음은 제목, 저자명, 요약, 목차 등을 포함하고 요약은 첫 장을 넘지 않도록 작성
- 본문의 장·절 구분은 I,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며,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사용
- <표> <그림>의 일련번호는 장절 구분하지 않으며 글씨체는 돋움(표 제목 10, 표 내용 10, 표 주석 9)으로 설정

- 참고문헌은 동양문헌의 경우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기재순서는 저자명, 논문명, 서명, 호, 발행처, 연도, 인용쪽의 순으로 기재하며 이중 논문명은 “ ”로, 서명은 동양문헌의 경우 『 』,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문의처〉

(0453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프리즈마 111)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국민계정리뷰』 담당자 앞

전화 : (02)759-4277, 5265 팩스 : (02)759-4387 E-mail : bokstat3@bok.or.kr

『국민계정리뷰』 수록 원고 목록 안내

『국민계정리뷰』 각 호에 수록된 원고의 목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의 ①조사·연구-②간행물-③발간주기별 검색-④계간-⑤국민계정리뷰에 게시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갱신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계정리뷰' (National Accounts Review) page on the Bank of Korea website.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a search bar, and a list of quarterly bulletins. The list has columns for '수시' (Issue Date), '주간' (Frequency), and '월간' (Volume). The current page shows 366 items across 1/37 pages.

수시	주간	월간	계간
반기	연간		

경제분석, 국민계정리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Quarterly Bulletin, 경제전망보고서, 지역경제보고서

Total : 366건 [1/37 pages]

2018년 제1호 경제일반 2018.04.30 519

2017년 제4호 경제일반 2017.12.22 139

2017년 제3호 경제일반

국 민 계 정 리 뷰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발행일 | 2020. 3.

발행인 | 이 주 열

편집인 | 박 양 수

발행처 |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

인쇄처 | (주)동화인쇄공사

- ▣ 본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은행 『국민계정리뷰』
○년 ○호 ○페이지에서 인용”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본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759-4277, 5265)
- ▣ 국민계정리뷰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 / 기념품코너(759-4805,
www.seowonbok.co.kr) 또는 정부간행물센터(734-6818, www.gpcbooks.
co.kr) 등에서 매권당 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